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09年4月7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
-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의사진행의 건 1
- 1.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 3
- 의원신상발언 8
-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

(10시08분 개의)

(「예,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문희상 오늘의 대정부질문은 어제 질문을 하지 못한 김동철 의원의 정치에 관한 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이어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해서 열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발언대로 일어나오며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서 합의를 다 해서 5분자유발언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김창수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안 주셔서 이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권선택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기 때문에 이것 시작 전에 해야 됩니다.)

시작 전에 꼭 해야 되겠어요?

○ 의사진행의 건

(10시09분)

○부의장 문희상 김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 출신의 김창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나마 뒤늦게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그와 관련한 한승수 총리의 정부 답변을 듣고서 정말로 경악과 그리고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바로 앞으로 행정도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건설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충청권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거취도 그에 따라서 저는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차명진 의원의 질의와 그리고 한승수 총리의 행정수도에 대한, 행정도시에 대한 무소신·무원칙·무철학의 그런 답변을 듣고서 저는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직 사퇴 문제까지도 거론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발언이 신상발언이 아니고 어떤 게 신상발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성 부의장은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저의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가 국회의원의 발언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론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차명진 의원의 질의를 빌려 ‘행정도시를 짓는 길은 망국의 길ियो, 그리고 유령도시를 건설하는 거다’라는 정부 여권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다시 한번 들춰 보십시오.

한승수 총리는 어저께 차명진 의원이 ‘한승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행정도시를 포기하고 전원도시, 에코도시, 기업도시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한번 그런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이 부분은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답변이 우리의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에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늘어놓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총리!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차명진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논리에 대해서 그 치졸성과 그리고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비록 전 정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대국민 약속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총리가 행정도시로 출퇴근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 교통비용이 얼마 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폼파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연담화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감소 효과에 대한 모든 문제는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그 논의 초기에 다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왜 다시 리바이벌 합니까?

그리고 차명진 의원은 마치 정부와 청와대가 신청한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벌어진 그 사태는 청와대가 총감독하고 그리고 한승수 총리와 차 의원이 보좌관으로 모셨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조감독을 하고 그리고 행동대장 격으로 차명진 의원이 연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음모의 시나리오를 당장에 그만두십시오. 당장에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4월 임시국회 이번이 가장 중요한 법안인 세종시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의장 문희상 김창수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쳐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여야가 모두 다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수 총리는, 그리고 정부는 빨리 행정기관 변경 고시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위법을 저지르거나 월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지금 감기몸살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것인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런 5분자유발언이라는 해피한틀에 갇혀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권은 행정도시에 무슨 자족도시니, 무슨 에코도시니, 무슨 녹색도시니 이런 것으로 자꾸 이 행정도시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축소 변질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
○부의장 문희상 열네 분의 질문 의원 중에서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계속)

(10시19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세 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좀 하시고, 충분히 중간에 언제든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우선 진행하면서 합의를 해 오라고요.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 5분 주십시오.)

합의를 해 오라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분명히 드릴게요. 중간에라도 드릴게요. 합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이 안돼, 계속. 중간에 합의해 오면 분명히 발언 드릴게요.

(○서갑원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평하게 해 드릴게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고 민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 왔던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는 불과 1년도 못되어 얼음보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오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근 들어 후퇴를 넘어서 질식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바로 비판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금의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 철학이 없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답게 조급한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치열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천박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또 민주주의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사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마는 국민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한 달 전에 제출한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를, 여야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그게 바로 대화와 토론이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그 위기의 시급성에 비한다고 그러면 하루속히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디 비단 대

통령의 뜻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다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의원** 제가 어제부터 우리 총리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신 분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파악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역할 중에서 행정 각부 통할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또 하나 총리에게 부여한 임무, 대통령 보좌는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보좌는 그냥 대통령 지시에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어도 어떨 때는 자리를, 직분을 걸고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용기 있는 직언을 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구체적인 예보다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 자리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 합당하다고 하면 대통령께는 언제나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견해가 용납이 됩니까? 비판적 견해가 용인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됩니다.

○**김동철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회의에서도 의논이 되고 있고요, 또 각 부처에서도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김동철 의원** 총리,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도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YTN 기자가 구속되고 MBC PD수첩 담당PD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리!

민주주의 사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 마디의 말을 쏟아내면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과 몇 사람, 그 몇 마디, 몇 부분의 말을, 표현을 문제 삼아서 ‘이것이 허위다, 법을 위반했다’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부의 치졸한 행태이고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아니,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그리고 네티즌들이, MBC PD수첩 제작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호소였는데 그중에서 극히 몇 마디의 말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면 그것이 국민들을 포용하는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몇 십 년 이코노미스트지를 애독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른 보도를 하고 있는 잡지입니다만, 주간지입니다마는 이번 보도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언론탄압을 다른 나라, 다른 정부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황 판단을 이코노미스트지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코노미스트지의 훌륭한 신뢰성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는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촛불시위라든가 MBC PD수첩이라든가 미네르바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MBC PD수첩에서 나온 사실이 사실하고 다른 것을 보도함으로써,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한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비판으로 국민을 오도하거나 경제에 혼란을 초래해서 국익을 해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법에 걸은 것처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운천 장관께서 작년에 농수산식품부장관하고 나가서 가지고 이것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찰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총리, 들어보십시오.

총리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

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식에 있어서 모든 자기의 인식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MBC PD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철 의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살아오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이 다수에게 영향을 주어서 국민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 만약에 이 정부가 총리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대단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정부가 그와 같은 큰 거짓말을 한 것이 뉘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철 의원 해 볼까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도 대만도 곧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정운천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에. 그러나 일본이 지금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당분간 수입할 것이라고 지금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언론을 동원해서, 전 방송을 동원해서 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그 당시에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협상이 끝나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 간의 쇠고기 협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난 뒤에나 그것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 PD수첩 보도에 일부 과장된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운천 장관처럼 이렇게 큰 거짓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요 PD수첩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을 너무 왜곡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광우병에 대한, 인간광우병에 대한…… 그리고 또 없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아주 강화시켜 가지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100일 동안 저희들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도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의원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축소하는 것도 저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 있으면서도 경제성장도 이룩하고 민주주의도 이룩하면서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대부분 인식이 대한민국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된 것 등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를 통해서 결국은, 인권위원회가 이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국제사회가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고, 검찰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사정기관으로서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박연차 수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을 보시지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08년 초부터 국세청은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부산지역 기업들을 내사하면서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 기업을 GFMIS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박연차 수사가 명백한 정치공작인 첫 번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지요.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기업들, 과거 전 정권과 관련되었다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으로 관련 하청업체, 시민단체, 임직원 그리고 그 회사의 자택, 회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가혹한 수사를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연차 수사 과정에서는 딸 3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조사하면서 하는 이런 비열한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세 번째 이유는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세무조사 했습니까?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은 해외로 도피하도록 방치하고, 대책회의를 한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은 아직까지도 검찰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일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요? 이것은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청와대의 지시 내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 저기 계십니까?

98년도에 우리 강봉균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 일 때 당시 국세청장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께 독대를 신청했을 때 강봉균 경제수석은 '국세청은 세금만 잘 걷으면 된다' 하고 독대 관행을 없앴습니다.

총리, 앞으로도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대면보고 요청하면 계속 받아 주겠습니까? 총리는 그리고 이를 손을 놓고 지켜보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박연차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는 제가 알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개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고 조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는 사실 법무부장관이 저보다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3회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 때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보고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세청이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한 말, 그 보도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보도가 언제 나왔는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도가 수개월에 걸쳐서 났는데 총리는 그러면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튼,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수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총리의 답변대로 이것을 정치공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하십시오.

박연차 사건은 과거 정권, 현재 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 정부가 정말 사심 없이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옷로비 사건, 검찰수사 한 번, 특검, 국정조사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최도술 특검 했고 사할린 유전 특검 했습니다. 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당시 정부들이 받아들였던 사건들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상설특검제가 대통령 선거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권력층 비리, 전·현 정권이 관련된 사건이야말로 이런 정치공작에 대해서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총리로서 뭐라고 논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제도의 건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총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의원**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야당이 정치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나라당 여러분들, 제발 좀 야당 주장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결백함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이번에 박연차 사건의 내용이 완전히 다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다마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모두 이렇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 사건을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말씀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 사건을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태광실업은 이 정권이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

히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효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면 태광이 5000억 원인데 효성은 6조 9000억 원입니다. 14배가 큼니다. 그런데 비자금 규모는 효성은 330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았습다. 수사 인력도 효성은 검사 4명이었습니다. 14배나 큰 회사를 말이지요. 태광실업에 대해서는 검사가 17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박연차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고 정치 공작이 아니고 표적 사정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해서 적어도 세무조사 한 1년 해 주시고 검찰 수사인력도 10배쯤 해서 한 180명의 검사를 붙여 가지고 한번 수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박연차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고 표적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도 사실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면 더 자세히 하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효성그룹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한전에서 받은 납품대금이 모두 정상 회계처리가 됐고 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령 위반 사기사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저는 대통령의 사돈기업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할 용의가 있다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미 제가 알기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철저히 수사했기 때문에 다시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검사 17명이 투입된 태광실업 수사와 검사 4명이 투입된 효성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가 철저한 수사라고 말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박연차 수사가 정치 공작·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부터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천신일 씨,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이야기들

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천신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고대 61학번 동기, 최측근 중의 측근, 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폭로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 지난 대선 때는 고대교우회장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작년 5월에 방중 경제사절단에 포함돼서 특혜성 광산채굴권을 따내기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무마 로비에서는 이종찬 전 수석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부터 먼저 수사하면 국민들은 박연차 수사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박연차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총리로서 답변이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법무부장관에게 한번 질문하시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 제2롯데월드,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시겠습니까마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평시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쾌청한 날씨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시 또는 준전시예, 야간에 그리고 구름 또는 악천후와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이 2개 이상이 겹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결정을 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 국방부장관, 정책결정 책임자들은 역사에 두고두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롯데그룹에도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어떤 기업이 입주할 하며 어떤 국내외 방문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 허가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에 갈채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는 다양성을 용인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

의의 텍스트는 비판의 자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를 보면 야당·언론·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전한 지적과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조차 가차 없이 반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비판을 두려워하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 죽이기에 몰두하면 사회가 경직되고 맙니다. 움츠린 사회,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발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동철 의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신상발언

(10시45분)

○부의장 문희상 지금 방청석에는 나경원 의원 소개로 남대문시장 상인대표 열일곱 분이 와 있습니다.

(○이시종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신상발언?

(「예. 주세요, 5분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정확히 신상발언이예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상에 관한 사항이지요. 중대한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면, 정확히 해서 신상발언에만 한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사규칙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관한 한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상발언이면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의 경우도 어제 신상발언 신청된 것을 안 준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계한 발언을 일체 마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면 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한해서 5분 발언하세요.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어제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은 우리 충청권 의원 전체에 대한 신상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4월 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조족지혈이고 강원·호남·영남에 어떠한 혜택도 없으며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한 망국의 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한승수 총리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만한 질문이고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발언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분할을 막고 싶다”라는 발언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시에 의장석을 점령하고 극렬 반대하던 당시의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들의 행태가 기억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통과 시에는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우리 충청도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이고,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후속조치로서 세종시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법률을, 제출을 많이 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아

직까지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법안 제출조차 없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예정고시를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예정고시조차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은 차명진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가 차명진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표출되었지 않았나, 이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발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진정으로 중단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님, 이것은 충청권 의원 전체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만약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조금만 축소나 변화, 중단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충청권 의원 전체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결사적으로 항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50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의원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입니다.

차명진은 맞습니다, 행동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명진이 누구의 행동대냐?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도지사만의 행동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으로 삼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그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 장차관은 국무회의와 국회에도 출석해

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재 등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취임 후 30일 만에 39차례 출장을 했는데 그중 3분의 2가 국회, 정당, 국무회의,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다”

누굽니까? 2000년 8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거부하고, 쓰러져도 오뎅이처럼 일어나서 자기 출신 부산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를 옮기자는 지역 구민의 요청에 이렇게 용기 있게,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의 행동대입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는 무책임한 졸속 공약이다. 이전 비용 문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즉흥적인 공약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을 낡은 정치라고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부기관이 서울을 떠나면 상권은 무너진다. 서울 광화문이나 경기 과천에서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언론사 등이 빠져 나가면 인근 백화점, 음식점, 상가 등의 경제망이 무너진다. 대신에 나는 대전·충남 지역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 소도를 만들겠다”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입니다.

저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2002년 12월 17일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충청도에서 그야말로 소신 있게 행정도시는 충청인을 속이는 거짓 공약이라는 그런 당당한 원칙론을 말씀하신 분, 표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신 분, 저는 그 이회창 총재의 그 당시 모습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바로 이분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자고 정말 진심 어리게 주장한 바로 그분, 저를 뒤에서 조종한, 바로 제가 그 행동대인 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차명진, 행동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의 행동대냐? 바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 말을 바꾸지 않는 진정한 지도자를, 바로 그 뜻을 따르는 행동대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57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룬 지 오래인데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민족보다 대립 갈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남북의 지도자들이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대중정(大中正)의 길을 향해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정’이란 ‘어느 한 편에 치우침 없이 곧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에서 혼란과 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의 현대사는 하늘의 큰 뜻을 이루려는 이 민족의 진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마지막 막으로 한반도에서 크게 충돌한 후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참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중정의 사상이 우리 한국에서 탄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북한보다 강자인 우리 남한에서부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 민족과 인류 평화를 위한 대동 화합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피곤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괜찮습니다.

○**김성곤 의원** 오늘도 열네 분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난 일요일 북한이 로켓을 쏘는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요란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시고 또 해외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대처하는구나 이렇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총리께서 남북 간 무력 충돌로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는데 총리께서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제 경제상황도 시장도 제대로 역할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지금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 PSI 전면 참여가 무력 충돌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어저께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무려 85.4%가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처럼 살아나는 경제에 이 PSI 전면 참여가 자칫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제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G20 런던 정상회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에 우리도 참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만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대응적인 입장에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표 시기는 우리 정부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논의 동향을 보아 가면서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아까 무력 충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무력충돌 가능성은 북한에서 일부 그것과 같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

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남북 관계의 틀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결코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응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곤 의원 다시 한번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별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지난 1년 동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는 새로운 국정철학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정립하고, 또 대통령께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직접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강경조치와 또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생공영정책 실현을 위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일관적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남한의,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용주의를 주장하시면서도 성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이 아무도 예상 못하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은 서독이 수십 년 동안 동·서 통일을 위해서 소리 없이 많은 투자를 해 온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준비 혹은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마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그와 같은 입장은 ‘갑작스러운 통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하는 것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근데 말만 상생과 공영이지 실제로 북한을 상생과 공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북한을 계속 비난하면서 상생과 공영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차 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사상 어떤 체제 위에서 합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은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고 인권의 보장 또 인류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이명박 정부는 6공화국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

○**김성곤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그 합의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글썽 오랜 기간이 될지 갑자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고 이것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고 그러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한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이후에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실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 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통일 과정을 상정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 말씀은, 우리가 주장하는 어

떤 이념을 통일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고 관찰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제도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될 중요한 이념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경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강경한 조치를 한 데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금강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닫고 급기야는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지난번 개성공단의 차단 조치도 있었고, 또 엇그제 로켓 발사를 하는 등 이러한 관계가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 탓이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대화를 제의해 왔고 진지하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기본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색은 북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을 ‘좌파 정권의 퍼주기’라고 맹공격하였고, 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이쪽에서 먼저 남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6·15 및 10·4 선언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한 급 낮은 총리 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중시한다고 해서 북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 선제 공격 선언 등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오는 말이 고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이 모든 합의, 그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구요.

(문희상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김성곤 의원**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다가 뒤에 존중하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처음에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이 합의를,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합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 이행 절차를 위해서 대화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 문제는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기저에는 계속 기다리면 북이 두 손 들고 대화하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데, 과연 북이 우리 의도대로 항복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남북 관계를 누가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 무시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해 왔고 또 협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문제는 뭐가 제대로냐는 것이지요, 방금 제대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관계는 정부가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올 때 그 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방식이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의원**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대북 무시정책이 북의 반발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손실이 커져서 오히려 우리가 두 손 드는 상황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렇게 전망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에게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이명박 정부는 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북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상과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국가입니다. 자신들의 사상·이념에 반하게 되면 어떤 이익도 포기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버리고 개방하면 3000불까지 올려 주겠다는 이 말이 이쪽에서는 선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모욕처럼 들렸을 겁니다. 앞으로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그런 정책은 오히려 낭패만 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핵 개방 3000’이 잘못된 대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점에 관해서는 그간에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은 매우 진지한 대북 제의입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핵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은 선택폐기론이 아닙니다. 핵 폐기와 병행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그런 큰 구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런데 요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가 ‘상생과 공영’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렇다면 그 말이 어쨌든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네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진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의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생과 공존과 공영……

○**김성곤 의원** 글썄, 그런 좋은 진의가 있어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입니다.

다음, 대북 실용주의 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상은 실용주의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념적 대결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은 소모적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아주 소모적이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그 성과를 보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북 실용주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실용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무원칙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반드시 결과주의나 성과주의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비방을 하고 강경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도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를 하고 교류 협력을 제의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글썄, 5년 내내 원칙만 주장하다 끝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 조건이 핵 폐기입니다.

저도, 민주당도 북핵 폐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북이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오히려 북의 핵 보유 동기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때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북의 핵무기 개발은 부시의 압박 정책이 초래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시 정부 초기 네오콘이 중심이 되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오히려 북핵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었고 결국 부시 정부 후반기에는 대북 완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이러할진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꾸로 대북 압박 정책을 쓰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대북 압박이나 강경 정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정말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매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화 정책이고 포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PSI 전면 참여, 압박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압박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압박이 아닌데 왜 북이 반발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대북 압박 정책

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의원** 북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정권의 안전보장이기에 핵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 선언, 북미 수교, 불가침 협약 등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혹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이런 포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선택폐기론은 지금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요,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선택폐기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북 정책이 선택폐기론은 아닙니다. 핵 폐기를 물론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병행해서 남북 관계가 같이 협력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핵 폐기를 완전히 마쳐야 될 하겠다 하는 그런 선택폐기론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비핵 개방, 비핵이 먼저 나오지요? 어저께 제가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이 진전 안 된다, 이런 논조가 계속이었습시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 발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또 공존공영하면서 평화통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의 핵이 폐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하고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한 이후에야 될 우리가 하겠다는 선택폐기론 하고는 그것은 다르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과 북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 관계가 팽팽 막혀서 미국 등 제3국이 나서 중재를 해 줘야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 아서 브라운 씨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르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은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매일 북한과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갈 길 바쁜 미국에게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남한을 제치고 북한과 먼저 대화하지 않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속 남북대화가 안 되면 결국 북미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미봉남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핵 문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제삼자로 전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주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통미봉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주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지금까지 물론 그런 입장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김성곤 의원** 장관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주체적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글썄, 뭘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진척시키려면 과거 정부와 북한 간의 협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소극적이었던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 작년 후반부터는 진보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4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이미 2007년 11월 16일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는 하여간 10·4 선언 등 남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을 하려면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물론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런데 구체적인 이행,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리회답이라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셔 가지고 ‘합시다’ 제안할 수 있는데 왜 제안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남북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존중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갖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남북대화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의원** 대화에 늘 마음을 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한번도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의제와 날짜를 정해서 누구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제의한 적이 없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구체적인 대화의 제의는 대화의 상대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답, 조만간에 제의하십시오.

하실 의향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좀 앞으로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2012년 북한과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에 합의하기를 제안합니다. 남북평화공동체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으며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북한도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고 또 소위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뭔가 통 큰 협의를 이루어 놓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의 말씀이신데……

○**김성곤 의원** 하시기 어려운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남북평화공동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공동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마는 남북평화공동체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전 선언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맺고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것을 북과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이미 6자 회담에서 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북핵 폐기 과정을 빨리 진전시키면 얼마든지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는 북한이 빨리 6자 회담에 나와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북핵 폐기 과정을 빨리 진전시켜 가면 남북의 평화공동체 문제도 그와 연동되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6자 회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이명박 정부 나름의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연도를 정해서 만드셔서 갖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지금 6자 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같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남북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남북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 점도 또한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작년 불교계 일각에서 그리고 금년 3월 1일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부예산 1%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도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1%가 많다면 0.5%라도 좋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썸,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하여간 정부가 남북,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요? 특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는 정부가……

○**김성곤 의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부는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한다고 그러는데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다만 그 점에 있어서 1%이다, 어떻다, 그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문제는 역시 그것은 남북 간에 또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 차원이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한 그런 인도적 차원은 계속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비료·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규모의 비료·식량 지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당국 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식량 지원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두 차례나 제의를 했습니다. 마는 북한이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식량이 갈 때 우리 마음도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저쪽에서 안 받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쉽게도 현재 이명박 정부 혼자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서 유턴하기도 어렵고, 북은 북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남북 경색 타개를 위해서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가치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야당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당과 민간의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와 제안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마는 하여간 이런 것을 귀 기울이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대화의 제의를 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대북 특사도 고려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사 문제는 어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중에 물론 특사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대북 특사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저는 특사단을 만들 때 여야도 이렇게 같이 꾸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엄청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평화통일을 위해서 손잡읍시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이며 아무리 악한 인간도 회개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부가 다른 인종도 서로 형제로 여기는데, 하물며 말과 글을 공유하는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중정(中正)’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60년간 남과 북이 자본주의도 써 보고 공산주의도 써 보고 그 장단점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입된 이념에 휘둘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손해를 끼쳐야 합니까? 북이 진정 ‘자주’를 외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실용’을 말한다면 이제 남북 지도자가 이념을 초월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손잡아야 합니다.

이제 남북의 정치인들이 민족통일을 추구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 위에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남쪽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이여, 우리 중정의 대 역사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경북 왜관동부초등학교 학생 66명과 인솔교사 2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또 잠시 전에는 허원제 의원의 소개로 부산진구 연학초등학교 학생 106명, 인솔교사 4명 등 110명이 방청을 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방청하는 학생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구상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모두들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문제입니다. 특히 핵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아니고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는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냉철한 이성을 통해 지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릇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녕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임무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대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연 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북한은 현재 1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하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퍼주기예 급급하다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에는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 즉 PSI에 참여를 할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전번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또 지금이 PSI에 참여할 적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언제 PSI에 참여하실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구상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비확산 차원에서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미 벌써 94개국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것은 하나의 제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 미사일과 관계 없이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전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즉 MD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지금 사정거리 300km로 한정되어 있는 사정거리를 500km 이상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에 대한 저희 검토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MTCR에 가입을 하고 미사일 확

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300km 사정거리, 500kg 페이로드 이상을 개발하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실제적인 안보상의 수요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구상찬 의원 혹시 2001년 MTCR, 그러니까 미사일통제체제에 북한을 가입시키는 전제하에 이것 사인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러한 노력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상찬 의원 이 약속은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3000km 이상 넘는 장거리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500km 이상 늘리는 MD체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또 3년 뒤에 다가올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외무장관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다음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롯데월드 신축에 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 산하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허가를 내 주기 직전에 국회 국방위 요구에 따라 항공운항학회에 2900만 원을 주고 열흘 만에 안전성 검증을 한 일이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저는 총리……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전 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어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이 제시한 동편 활주로 3도 방향 변경과 현행 안전시설과 장비가 보강되면 서울공

항의 작전운영과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 사항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협의서의 충실한 이행과 비행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국내 항공운항 학회에 2900만 원을 주고 열흘 만에 했다는 게 총리실 행정위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1조 7000억 원의 초고층 빌딩을 짓고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아깝고 3개월이 너무 길어서 안전성 검증을 이렇게 줄속으로 하는 정부를 과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통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은 대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검증 용역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원점부터 연구 검토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용 있는 국내 기관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먼저 현안인 미사일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미국 측으로부터 혹은 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의 실패 통보를 몇 시쯤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최초부터 실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실패 여부도 최초부터 확인을 해 오는 과정에 있었으나 그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느라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는 필요했습니다.

○**구상찬 의원** 미국은 발사 1시간 뒤 12시 30분부터 북한의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6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7시 30분 근처 돼서 대기권 진입에 실패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은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다는 오보를 6시간 동안이나 계속 보도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정부는 대기권 진입 실패를 왜 이렇게 즉시 언론에 알리지 못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한미 간에 최초부터 초기에 그러한 실패 징후를 판단하였으나 최소한의 추가 확인 절차와 또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측과 확인하여 약 18시경에 한미 양국이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미국은 이미 12시 30분에 로켓 대기권 진입 실패를 공표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미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한미 양국은 약 18시경에 공식적으로 양국이 확인하였습니다.

○**구상찬 의원** 장관께서 북한의 미사일이 대략 어디쯤에 추락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미 발표를 하였지만 1단계 탄체는 동해상, 또 2단계·3단계 탄체는 태평양상에 탄착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더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직 정확한, 그러니까 최초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미 간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로도 하와이 동쪽 1500마일 해상에 82조각의 파편으로 떨어져 미국 군함들이 지금 수색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까라는 현재 한미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첩보는 공유하고 있지 않고, 미측이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좋습니다.

이제 탈도 많은 제2롯데월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군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감명받은 바 있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리께 질문했던 2900만 원짜리 줄속 안전성 검증은 왜 안 된다고 장관께서는 얘기하지 못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구상찬 의원** 일단 555m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서 조종사나 관제사의 실수로, 혹은 불가항력적인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나면 조종사나 관제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더구나 롯데와 공군이 체결한 합의서 3조 2항을 보면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나마 롯데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군이 고의로 사고를 낼 리는 없습니다. 그건 조종사의 실수나 바람, 구름, 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악천후 때문에 발생할 것인데 이 합의서는 결국 롯데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겁니다.

또 이 합의서에는 롯데와 공군의 책임만 언급되어 있고 정작 허가를 내 준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총리실 행정위원 아무도 이런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제2롯데월드가 그 자리에 먼저 들어서 있고 성남 공군기지가 아직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555m의 최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공군이 성남에 공군기지를 짓겠습니까? 장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이번 경우와 역의 경우인데, 그 역의 경우에도 법적 또는 작전 운용적, 또 비행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역도 성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15년 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해 왔던 국방부와 공군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여기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군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공군의 입장은 서울기지의 작전적인 운용과 비행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조정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 오다가 공군이 그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공군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행 절차 변경뿐 아니라 비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런 것까지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롯데에서

비행 절차만 주장한다면 동일한 결론이 공군에서 나올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장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롯데가 돈을 대겠다 하니까 허가를 해 주고, 돈을 못 대겠다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아니, 우리 정부가 몇천 억이 없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반대해 온 것을 갑자기 이렇게 허락하면 국민들이 설득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전 운용과 비행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아무리 기계와 컴퓨터가 발달해도 결국 기계를 조종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과학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막아 보자고 비행안전구역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장관?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 김포공항과 가까운 상암DMC 자리에 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133층짜리 고도 640m DMC 빌딩을 짓겠다는데도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때 롯데월드 문제를 대통령께서 재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전경련에서 그렇게 건의를……

○**구상찬 의원** 글썄, 그 회의 이름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 대통령께서 국가 안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허가를 해 주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이, 안보와 안전을 책임진 주무 장관이 대통령에게 ‘안보와 안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그러한 전경련의 건의가 있는 이후에 공군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12월에 롯데 측에서 비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조건으로 서울시에 건축 재협의를 하여 공군에서 또 국방부에서 행정협의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그러한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군은 재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찬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입니다. 김포공항이 옆에 있습니다.

강서지역 지역주민들의 재산 피해 규모가 53조에 달합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지 바로 코앞에 555m의 인공 장애물을 허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큰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롯데월드를 허가해 줬으니 다른 지역에도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수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을 텐데 이것 장관께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는, 또 공군은 그러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또 고도와 관련된 민원이 전 군에 산재한 공군기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전과 비행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평가를 하고 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공군에서 자체 검토하여 12월까지 는 여러 가지, 단순히 성남이나 김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공군기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 나가서 금년 말까지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장관, 앞으로 이것 정리 잘하십시오. 많은 의혹과 해명이 요구되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 정부 끝나고 나서 큰 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북한 정권은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통신선 차단과 해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억류했습니다. 미국의 여기자 2명과 함께 이번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실상의 북한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지만 정작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금강산 관광도 개성 관광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위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장관께서 직접 만드신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이 지켜지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실험했으니 원천 무효된 것 아닙니까, 비핵 개방 3000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 지난번에 개성공단의 차단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로켓 발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없다고 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남북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통행 차단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간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인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가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되고 더구나 통행의 제도적 보장

과 실효적 이행이 제대로 되는 등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아침에 모 야당 의원님의 박연차 게이트를 ‘정치 공작’ 또는 ‘야당 탄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능했다라도 도덕적인 정권이었다고 주장해 왔기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게 아니라고 큰 고함을 치셨던 분들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임 때부터 안하무인격 성품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더럽지만 나는 깨끗하다고 빼기다가 이제 형, 조카사위, 친구, 후배 보좌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조사받고 구속되고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씨가 줬다는 500만 볼 때문에 이제 본인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공작입니까?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실히 일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통령의 권력으로 한방에 제압해 버린 오만의 극치입니다.

지금 검찰의 노건평 씨 수사를 잘 살펴보면, 노건평 씨가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받은 정황으로 볼 때 돌아가신 남 사장이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리 없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은 이제 남 사장의 유족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할 때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과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천문학적인 돈 14조 원이 들어

가는 10·4 선언을 덜컥 합의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음 정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야말로 한심함의 극치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위기, 북한 로켓 발사 위기, 핵 위기, 정치 불신, 대립과 갈등, 비생산적 이념 대결 등 많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소모적 정책과 갈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정쟁과 분열을 일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강자가 후한 범이고 승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승복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동행은 아직 없습니다. 여든 야든 정치적 노선과 신념을 떠나 잘사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만들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서로 먼저 양보합시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매를 걷겠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낮추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곤 의원께서도 ‘사랑합시다’ 얘기 하셨지만,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 사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구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핵심적으로 요령 있게 하셔서 시간을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우리 당의 조순형 의원이 세종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으니깐 뜬금없이 정치권 합의 운운하시더니 ‘지금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세종시의 법적 성격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법적 성격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법적 성격을 무슨 논의를 합니까, 법에 분명히 있는데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왜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떤 형태의, 자치시로 할 것이냐 특별시로 할 것이냐 특례시로 할 것이냐는 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16조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무 유기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는 2005년 10월입니다만 이후 지난해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된 목표, 임무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현재 소관기관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자족기능 확충은 특례시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으세요. 총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례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례시가 아니라……

○**국무총리 한승수** 어떠한 도시로 가든 간에, 어떤 도시로 가든 간에 자족적인 기능이 없는 도시는……

○**박선영 의원** 특별자치시로 가기 위한 걸음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물으면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처럼 무슨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한나라당 의원이 물으면 특례시처럼 말씀하시고, 법적 성격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국회의원이신 박선영 의원님께서 법적 성격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만은 정부로서는 어느 도시든 간에 자족적인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별시든 자치시든 그냥

시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자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자족기능 자꾸 말씀하시면……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특별자치시로 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세종시를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1월 28일 날 행복도시를 튼튼하고 빠르게 이명박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선진당 총재님의 발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총재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요.

이명박표 명품도시가 어떻게 망국도시로 둔갑을 합니까? 국민적 합의와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행복도시입니다. 이 행복도시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실망도시가 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망국도시가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는 논평을 하지 않고 그냥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품 대통령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국무총리께서 명품도시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용어를 그것 말고 다른 용어는 제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굵실거리면서 이명박표 명품도시 운운하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망국도시라면서 충청도 사람들의 가슴을 짓밟고 자존심을 짓밟고 그리고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 박선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국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글썸,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 박선영 의원** 그게 아니었으면 어제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지요.
- 국무총리 한승수** 명품이라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고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명품도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선영 의원** 그러면 망국도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제 차명진 의원이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대재앙이라고 했을 때 총리 자격으로서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제지를 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박수를 칩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박수친 적도 없고요. 또 의원들이……
- 박선영 의원** 부창부수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박수치지 않으셨지만 입으로 부창부수하셨습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총리는 일일이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 박선영 의원**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박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 박선영 의원**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 국무총리 한승수** 이 자리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박선영 의원** 연연하지 않으면 내려오십시오.
- 국무총리 한승수** 때가 되면 저도 내려갑니다.
- 박선영 의원** 명품도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십시오.
-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에는 행복도시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영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장내 소란)

- 의장 김형오**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박선영 의원** 동료 의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리께서 언급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까 차명진 의원이 2000년 당시에 이회창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했는데 보좌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개념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합니까? 총리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2000년도 당시에 이회창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 당시에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행정기구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옮겨 가고 그리고 외국 공관까지도 옮겨 가는, 말 그대로 천도였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신 이회창 총재께서 반대를 하셨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르십니까? 어떻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총리께서 그렇게 가볍게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십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차명진 의원이 언급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선영 의원** 의원이 발언한 게 아니라 총리께서 지금 되풀이하셨습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글썸,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선영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국회의원이 한 얘기를 저는 말장난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 박선영 의원** 그러면 들으십시오. 말장난하지 않으실 것이면 들으십시오.
- 그 당시에는 천도 개념이었지 행정기관이 옮겨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지금의 세종시법을 만들었습니다.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강소국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세종시는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21세기에는 행동대원도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힘만 가지고 행동대원 할 거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보좌관이 총재를 보좌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총재께서 대선에 실패하신 겁니다. 이 자

리에는 없지만 차명진 의원,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뭘든 신드롬이 뭘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뭘든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전에 히틀러가 체코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은 유화정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뮌헨에서 회담을 열고 히틀러가 더 이상 팽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데텐 지방의 병합을 인정하고, 회담을 두고 당시에 영국 대표였던 네빌 체임벌린이 런던에 도착해서 ‘영광을 가져온 평화(peace with honor)’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뒤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해서 가장 유화정책의 현상으로 대표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신드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과연 외교관 출신의 학자다운 분이십니까.

이번에 북한이 로켓 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3억 불 정도가 들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3억 불 정도면 지금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영 의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600~370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열 번, 스무 번도 더 로켓 발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 지원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지금 인도적 지원이 약 2조 6000억 원, 또 경험으로 한 1조 10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뭘든 신드롬이 주는 교훈이 됩니까? 비이성적인 히틀러가 이성적일 것이라고 믿고 유화정책을 쓰면서 체코의 3분의 1을 떼어 주면서 잠잠히 있어 달라고 했을 때 히틀러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치의 광기를 부려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통해서 뭘든 신드롬이 평양 신드롬으로 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확고한 원칙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사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북한과 상생 공영해 이와 같은 남북 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의원** 확고하고 의연하게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단호하고 의연하게, 확고하게……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럼요.

○**박선영 의원** 그런데 PSI는 아직도 고려 중입니까? 언제 결단을 내리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PSI는 이것을 자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침에도 답변 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앞으로 점점 더 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굉장한 암운을 걸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결정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시기는 조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시기는 계속 고려하고 조절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영 의원** 계속 고려만 하다가 고려장 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않을 겁니다.

○**박선영 의원**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을 팔아서 강성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조선신보 보도 보셨지요?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 처리를 두고 6자회담 대신 미·중·일 3자회담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국무총리로서 위기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로 가지고 가

면서도 항상 여러 가지 긴장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선영 의원 상생한다고요? 지금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 북한도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박선영 의원 제가 국무총리라면 제2의 이준열사라도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안보 불안감에 떨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눈으로 보듯이 뻔하게 눈앞에 보이는데 아직도 고려만 하고 있겠다, 입으로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PSI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공조체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SI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정부는 'PSI에 가입하겠다, 다만 시기는 지금 조절 중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박선영 의원 계속 고려하다 고려장 당하십시오. 혼자만 당하시면 좋습니다. 온 국민이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목적이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의가 뭐냐고요?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은 지금 이것을 위성용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실제 목적을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영 의원 실제 목적이 뭐냐고요. 총리로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대외 발표는 위성 발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성 발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다만 장거리 미사일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좋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왜 쏘려고 그럴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거야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방위를 위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수출품목으로 해서 대량살상 무기에 관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습니까?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만일 이것이 지금 태평양 중심에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개발한다고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세계 모든 국가가 위협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박선영 의원 북한이 유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날렸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어디까지든지 도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한다고 하면 위협받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북한이 위협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미국하고 공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는 그것이 한반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영 의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도 남한은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것 이외에도 다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영 의원 다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는 유사시에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우리가 길러서, 물론 자주국방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라고 하면 그동안에 한미동맹이 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지요. 미국의 공조를 받아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산 속에 들어 있어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군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저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한미 동맹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맹관계는 우리가 50년 이상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는 단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습니까? 특하면 말을 바꾸는 미국이 과연 우리가 믿을 동맹국가인가요? 지금 대북특사인 보즈워스는 대학교 교수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해 보셔서 아시지요? 저는 교수 하면서 이런 특사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엄격한 학사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대북특사 합니까?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금 임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는 지금 물론 대학 학장을 하면서 특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옆에는 성 김이라고 하는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6자회담 대표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굉장한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외교관계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6자회담 대표하고 대북특사가 똑같은 일을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6자회담 대표와 특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냈습니다. 과거에는 힐 혼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 김하고 스티븐 보즈워스가 분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오바마 정권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시 정권도 처음에는 강경한 대북 입장을 견지했다가 나중에는 원칙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기 말에는 핵 불능화의 검증방법조차 챙기지 못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미국을 동맹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믿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미국이 현재 우리 정부에 보내온 대북 제재안은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맹관계는 믿고 기다리는 것

이 아니라 항상 양측이 협력하면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박선영 의원**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이번에 만났고 앞으로 6월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아무리 굳건해도 수시로 말 바꾸는 미국만 믿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미사일 방어 계획에도 적극 참여하십시오. 현재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사거리 300밖에 안 되지요? 그것 빨리 푸십시오. 그래서 미사일 주권 찾으십시오.

지금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박선영 의원** 국민을 위해서 경제 살려놓고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그 경제 어디에다 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왜 국가안보가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십니까?

○**박선영 의원** 이제 같이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군용공항 근처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을 경우에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도시와 아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례들입니다. 1945년 미 공군 폭격기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충돌했습니다. 참영화 같은 일이지요. 불행하게도 1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다음 1992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보잉747기가 스키폴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1층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난달 3월에 사고가 났던 에콰도르의 키토공항입니다. 에콰도르의 키토공항은 전 조종사들이 요주의 공항으로 지목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항공기 하고 빌딩 간에 충돌이 많이 생기는 공항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지도를 함께 봐 주십시오

오.

저 지도 잘 보십시오. 똑같이 10만분의 1로 축소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에콰도르의 육군참모총장과 관광부장관도 바로 저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지도는—잘 보십시오. 똑같이 10만분의 1로 축소를 했는데—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잠실과 성남공항이 지금 사고 다발지역인 에콰도르와 매우 흡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이십니까?

키토공항과 사고 다발지역인 곤잘레스하고는 거리가 불과 4km입니다. 우리 롯데월드 건설 예정지와 서울공항의 거리는 약 5.5km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의 키토공항 주변의 건물은 높아봐야 20층입니다. 우리 롯데월드는 112층에 무려 550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마는 날씨와 항공기 문제로 초고층 빌딩과 충돌할 경우에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 주는 해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라서 유사시에 아주 거칠게 이착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알기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전 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제2롯데월드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민과 의원님의 이와 같은 우려사항이 완전히 불식되도록 협의서에 충실한 이행과 비행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사고 발생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하다는 게 아니라 낮다고 하십니까? 인간의 생명은 전 지구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총리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알기로는……

○**박선영 의원** 그런데 사고 발생률이 지금 낮다고 하셨습니다. 0%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알기에는 발생률이 지금 1000만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 보고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영 의원** 북한의 로켓실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박선영 의원**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어느 사항이나 100% 위험률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00만분의 1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하여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키토공항 사례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리의 직을 걸고 대통령께 직언 하십시오. 제2롯데월드 건립은 안 된다고,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직언을 하십시오. 왜 직언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직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변경을 하고 계기를 강화하고 하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영 의원** 그 보고서 엉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개성공단을 남북 경협과 평화 공존의 상징이라면서 전 국민, 아니 온 세계에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목청 높여서 외쳤던 정경분리 지켜졌습니까? 외국기업 유치했습니까? 자유로운 경제지역 건설이 됐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을 해서 생산한 뒤에 이것을 국내에도 공급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경협 사례였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래, 지금 다 됐습니까?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정경분리도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외국 기업은 3개인가 4개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한 실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국제사회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노벨상도 받았지요.

둘째,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정부지로 솟는 땅값, 그리고 높은 임금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인들 달래서 싼값에 공장 주고 싼 임금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데려갔지요? 그러나 오늘 돌아온 것은 오늘도 또 통행이 끊기면 어쩌나 안전성이 없어서 바이어들이 거래를 끊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진 철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불쌍한 노동자들을 속였습니다.

지금 얼마 주고 있나요, 임금을?

○**국무총리 한승수** 아마 70~75달러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박선영 의원**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실제로 거기서 받는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5달러입니다. 중간에서 북한 정부가 전부 착취하는 겁니다. 분명히 합의서에는 우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줍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대체로 70달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것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수령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영 의원** 쟁겨 보십시오.

전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중소기업인들을 속이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까지 속이는 이 희대의 사기극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도록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개성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개성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이 더 조장된 그와 같은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 합의서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중소기업을 다 속이고 중소기업이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겁니다.

○**박선영 의원**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책 세우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아시다시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을 조사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서 남북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정부는 강력히 회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쓰고 계시냐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지금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석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 이유도 모른 채 억류되어 있습니다.

미국, 북한하고 외교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면 접교섭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가능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의 경우도 이번에 미국계 기자 두 사람을 두만강 근처에서 데려다가 평양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미국 당국하고 접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한 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통일부장관에게도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통일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관 출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면접교섭권 행사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외교관 출신인 총리 왜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외교관 출신이라고 북한이 마음대로 말을 들습니까?

○박선영 의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책을……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는 미국하고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그 나라들하고의 관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한 관계 아니에요?

○박선영 의원 맞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아산 직원이 석방되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북한하고 우리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제 박 의원, 정리해 주세요.

○박선영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감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합의서의 내용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제2·제3의 박왕자씨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합의서 제대로 점검한 후에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의서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 사람을 보내니까 지금 저렇게 억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라니요?

○박선영 의원 지금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당국이 강제로 억류한 우리 아산 직원을 보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정부에서 하루속히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의장 **김형오** 이제 총리 들어가세요.

○박선영 의원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장 **김형오** 이제 박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박선영 의원 예.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질문 도중에 답변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국무위원의 답변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질문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전에 본회의 중에 발언신청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계속되는 여러 형태의 발언신청은 본회의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의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야기하고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진 사례도 봐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은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 이윤성 부의장이 김창수 의원의 발언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1993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를 발사했고 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킨드급 6발 등 총 7발을 발사했고 급기야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4월 5일 오전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체제 홍보와 우주개발 명목으로 약 5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로켓을 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까지 온 데에는 지난 정권의 미온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여의도에 꽃이 만발해 있던데 즐길 겨를이 없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로켓 발사 장면이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것이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대응하면 보복하

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결속시키고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압박해 앞으로 대북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은 내일모레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 악화설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는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발사를 강행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보아서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1987년부터 92년까지 북한이 전세계에 250기의 미사일과 관련 부품·기술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5억 8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1년 재정규모의 약 17%에 달하는 그런 상당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결국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이 준비한 전 세계를 향한 무기구매 판촉용 상업광고가 아니었는가라고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것도 북한 의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유기준 의원** 북한의 국제적인 무기거래 커넥션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국방부는 그러한 북한의 국제적인 무기에 관한 정보를 미국 등 우리 우방국이나 관련 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87년부터 92년까지 벌써 5억 8000만 달러를 외국에 수출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아마 제3세계에 많이 수출했을 것으로 보는데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리고 그동안 북한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주공

간까지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다단계 로켓은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정책과 연계된 기술로도 인식되어 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로켓 발사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북한의 야욕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리고 이번 로켓 발사 비용은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재정규모 35억 3000만 달러의 10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장관, 발사 비용을 5억 달러로 보았을 때 옥수수 몇 t 정도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5억으로 옥수수 몇 t 살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기준 의원 국제시장의 가격이 변합니다마는 현재 대략 한 200만t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1년 옥수수 식량 부족분이 117만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번의 5억 달러를 가지고 옥수수를 사면 200만t을 사고, 그것은 북한의 1년이 넘는 거의 2년치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체제 선전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공위성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여도 또 특히 이번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하였더라도 그러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계되는 기술, 특히 그 추진체나 단계에 대한 분리기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군사적 미사일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민이 굶주려서 지금 살기가 어렵고 아사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필요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전혀 필요없는 것을 하고 있으며……

○유기준 의원 오전에 PSI 참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PSI 참여는 하되 시기를 조율 중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서 참여 결정을 하

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사이에 변경이 있을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PSI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전에 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서 PSI에 참여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함께 운반 수단까지 같이 갖는 데 문제가 있고 정부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그 절차·방법·시기 이런 것이 언제가 적절한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준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전 세계에 미사일 등을 수출하고 있고 또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PSI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그리고 지난 정부 때 PSI 참여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미 PSI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PSI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 범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PSI와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WMD—대량살상무기입니다—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남북해운합의서는 검색을 해서 무기를 적발해도 그 선박을 압류할 수 없고 퇴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SI는 검색을 한 후에 만일에 무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그 선박까지 나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북한 선박의 목적지가 제3국일 경우에는 남북해운합의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PSI만이 적용될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해운합의서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2006년에도 우리 해양경찰청이 북한 선박에 대하여 스물두 번이나 콜사인을 보냈는데도 한 번도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응답한 예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수백 회의 교신이 있었습

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회도 그 이후에 최초 응답은 안 했으나 2회 또는 3회 이렇게 계속 호출을 하였을 때 응답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어떤 내용으로 응답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묻고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항로나 현재 위치 이런……

○**유기준 의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기본적인 것이 교신이 됩니다.

○**유기준 의원** 북한은 우리가 PSI에 참여할 경우에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PSI는 전 세계적으로 94개국 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는 북한만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협력체제인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과거 몇몇 나라들이 실제로 북한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또 PSI를 행사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2003년 4월 호주에서 150kg의 헤로인을 호주로 밀반입하는 데 사용됐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재판을 거쳐서 압류되었고 2006년 3월 23일 시드니 앞바다 해상에서 호주 공군에 의해서 격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그다음 두 번째는 2006년 10월 홍콩에 의하여 북한 선박의 강남1호가 억류를 당한 적이 있는데 금속폐기물을 신고 대만으로 향하던 중 홍콩에서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억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1호가 그 당시 억류를 당한 북한의 첫 번째 선박이 아니고 검문을 받은 아홉 번째 선박이고, 그중 6척이 2006년 6월 중순까지 홍콩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그리고 프랑스도, 자국 본토는 아

닙니다마는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테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그 위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북한 선박과 선원을 검색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 해당 선박이 북한의 항구를 출항할 때 우리 한국 영해를 지나가는 경우에 이 선박들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체제로?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항로로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그 선박의 목적지가 제3국일 경우에는 도저히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세 선박은 목적지가 전부 다른 나라입니다. 도저히 그러면 검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남북해운합의서상에는 남북 간에 지정된 7개 항구 간을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러니까 목적 항이 정해져 있는 것만 검색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세 선박의 경우에는 그 목적지가 제3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에 WMD가 선적돼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또 마약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운합의서가 PSI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는 지금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PSI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차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기준 의원** PSI 참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조치입니다. 장관께서는 PSI 전면 참여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셔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기준 의원** 북한이 지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서 주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알려 주었지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발사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발사 30분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기준 의원** 우리하고 일본은 왜 빠졌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우리에게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의원** 왜 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북한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인공위성이라면 알려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개별국가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제 관계 기구, 인공위성을 관리하는 국제 관련 기구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 IMO를 비롯해 가지고 국제항공기구 등 거기에 통보를 함으로써 요건은 충족되는 겁니다.

○**유기준 의원**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이 됐든 어쨌든 로켓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우리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준 의원** 그거 왜 위반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하면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성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견해입니다.

○**유기준 의원**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조선신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 정책과 연계된 기술로 인식돼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국제법상 금지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이번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1718호 위반을 하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MTCR에도 가입을 안 했고 그런 개별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제법에 위반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국제법에 우선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기준 의원** 어제오늘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어떤 합의에 이르러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어제 우리 시간 새벽 5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 후에 비공식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일본하고 소위 P5+1 비공식회의가 2회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각 수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지금 미국·일본 입장과 러시아·중국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 차원의 경고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원래부터 원했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북한에는 미국 여기자 2명이 억류되어 있고 또 개성공단 직원 1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미나 남북 간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안보리 조치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계 여기자 2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다만 개성공단에서 지금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국자간에 연락을 통해서 엄중히 항의를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접견도 안 된다면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채찍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여쭙 볼게요.

한미 미사일협정, 2001년도에 체결됐는데 300km 이내 탄두 부분은 500kg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정에 맞추어서 이걸 개정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썄, 그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국방 수요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다음에 당근도 필요합니다,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무리 상대국이 우리하고 적성국가라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일에 즈음해서 어떤 대북특사 혹은 검토 중에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외교부장이……

○**유기준 의원**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1일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기준 의원**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도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장거리 로켓도 만일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상당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로켓까지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핵 보유국 및 그다음에 핵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의원** 거론대로라면.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소형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첩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운반체를 함께 가진다면 그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평화 안정에도……

○**유기준 의원** 지금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정 수위의 제재가 가해지겠지요? 그러면 북한이 또 다른 카운터액션(counteraction)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지 못한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트 브라운 CIA 전 아시아지부장, 또 6자회담 미국 측 전 차석대표인 빅터 차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06년에 1차 핵장치실험을 한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준비 없이 2차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유기준 의원** 항상 그 정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예, 들어가시고.

다시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황금교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기준 의원** 황금교 이론, 어떤 일이 실행 착수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을 다시 중지시키는 그런 중지 미수를 하는 것을 황금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후퇴할 수 있는 그런 황금교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일반론적으로……

○**유기준 의원** 지금 기수까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기준 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미국인-루거(Nunn-Rugar)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래서 이게 미국이 소련연방을 도와 가지고 핵이라든지 화학·생물학 무기를 해체하고 또 발사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북한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 이 법안을 만든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이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의 관료들이 년-루거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밝혀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에서 만일에 잘 정착이 된다면 이러한 년-루거 프로그램에 따라서 북한 핵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경우 년-루거 법을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소련의 그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년-루거 법에 의한 재정 지원, 미·러 간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아마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WMD 위험무기뿐만 아니고 제3국에 있는 그러한 무기 해체에 있어서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험무기를 해체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과 국제공조 강화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주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생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러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모든 것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흥·강진·영암 출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되풀이되는 북한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있습니다, 예.

○**유선호 의원**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 대북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명박 정부는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서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북한은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선호 의원** 뭐 그 말씀은……

○**국무총리 한승수** 여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유선호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 간 대화·협력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남북 간에 이와 같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 말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또 지난 정권의 성과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통일부는 필요 없다고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 관광 중단, 경협사무실 폐쇄, 남북 간의 모든 대화 통로의 중단, 지난 1년간 한반도를 긴장과 위기로 몰아넣고 과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거리가 3200km가 넘는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 아닙니까?

로켓 발사로 위기와 긴장이 높아지고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 로켓 발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의 책임입니다.

니다. 더욱이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제재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무력감뿐입니다.

대북정책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지난 1년 동안에 당국 간의 대화는 중단이 됐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 못한 책임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북한은 아시다시피 전 정부인 98년과 2006년에도 로켓을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히 저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총리께서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가 부족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제의를 받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된 것을 자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유선호 의원** 총리의 말씀은……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은 북한이 좀더 유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정말로 공허합니다. 이명박 정부 1년간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공식 라인을 포함한 모든 핫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남북 소통능력이 역대 정권에서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대북정책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관성을 상실한 그런 난맥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특사 파견과 PSI 참여 등 냉탕·온탕 정책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북한에 대해서 총리 말씀대로 대화에 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저희로서는 하여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미 있는 이와 같은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동안에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 이유를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관되고 신뢰 있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금 외교안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방향의 대통령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외교라인 재정비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 듣는 것보다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셔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MD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시키고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둬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여론을 취합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제재 가결 이후에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서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은 MD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시키고 PSI에 전면 참여하는 길로 보일지 모릅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를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핵무장의 명분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그리고 긴장과 위기의 지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핵무장과 군비 경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2006년도에 미국, 러시아가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 축적을 거꾸로 돌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전진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은 않겠다고 했으며 대북 특사도 보낼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PSI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의 발언과 당국자들의 발언은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상반되지 않습니다. PSI는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다. PSI는 봉쇄도 아닙니다. PSI는 공해상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의 영해에 들어올 때 그런 위험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선박에 대해서 임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학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지와 신호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보여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장관은 그와 같이 답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주요 국가들도 6자회담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PSI 전면 참여가 결코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향후 대화 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소외시키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선택지만 좁아집니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대단히 많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미사일, 핵 등 그런 위험무기를, WMD를 확산할 의사가 없다면 PSI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I는 이미 국제규범으로 잡혀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선호 의원** 향후 대화 국면을 생각해서 냉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발사된 북한 로켓이 인공위성이고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 공식 입장은 인공위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는 점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유선호 의원 좋습니다. 그럼 시도를 전제로 하고, 이 우주발사체인 인공위성은 ICBM 수준의 미사일과는 일단 발사 각도나 운항 궤적이 다르고 또 탄두의 장착기술, 대기권 재진입 시의 마찰열 감소를 위한 설계기술, 또한 목표물 타격을 위한 유도제어기술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이 인공위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발사 각도라든가 탄두로 봤을 때 인공위성 궤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사용한 로켓 추진체가 ICBM, 대륙 간 탄도탄, 장거리 3단계 로켓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무기 쪽의 체계에 가깝다는 점이 저희 우려 사항입니다.

○유선호 의원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인 대량살상의 무기 확산의 문제로 바로 공격하기에는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문제는 북한이 핵 능력이 없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하등의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났듯이 핵 능력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장관, 이 문제는 북한의 의도나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문제를 국제적 공조의 달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그런 북한의 잠재된 의도나 위협성에 따른 그런 대결적인 대응보다는 북한이 핵무장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그런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6자회담과 남북 간,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가 북한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위험 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선호 의원 유엔 안보리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까라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추가 결의안에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호 의원 추가 제재결의안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선호 의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6자회담 이탈 방지와 국제 공조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유선호 의원 냉각기 이후에 대화의 복원을 염두에 두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호 의원 안보리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첫째로 북한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비용을 들여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첫째로 내부체제 단속과 자기의 사기 앙양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수출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을 시켜서 대미 협상을 강화하려는 그런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첫째는 북한 내부의 결속 강화, 두 번째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협상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국 여기자의 억류가 저는 전형적인 협상 포석이고, 또 이번 로켓 발사 전에 북한이 미국에 발사 사실을 사전 통보한 건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것도 저는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지만 정권 출범 시에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이미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천명한 바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선호 의원** 미국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에 치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아프간, 러시아 등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쯤이나 되어야 대북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해서 대화 국면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로켓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위성 발사를 강행하지 않고 오히려 6자회담에 나오면 좀더 효과적인 대미 협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또 미국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선호 의원** 그 점에 있어서는 장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그 점에 관해서 정확한 판단과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전개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발생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도출 과정과 99년 페리 프로세스 탄생 과정에서 보여 준 당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자세의 차이를 보도록 합시다.

94년 제네바 합의 구도에서는 김영삼 정부는 핵보유국과의 대화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서 한국 정부 스스로 소외될 뿐만 아니라 합의 구도도 지연됐습니다.

99년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의 끊임없는 대북한 노력 덕분에 일정이 앞당겨지고 성과가 풍부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를 가져왔던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기관리를 해냈고, 발사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6자회담을 복원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교훈과 지침을 얻어야만 됩니다. 장관께서 아까 그러한 독단적인 견해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 6자회담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외국 언론에 1990년대 말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선호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여러……

○**유선호 의원** 최근 여야에서 국무총리급의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마는 저희는 항상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항상 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어느 급이나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호 의원** 또 그러한 건의를 하기에 앞서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계승, 실천한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미 정부로서는 7·4 공동성명 이후 북한하고 합의했던 합의문이라든가 또 협정에 대해서 기본정신을 다 준수한다는 의사를 공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대북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정부는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위기로 대화를 풀어낸 김대중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대립과 위기 국면을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다음은 한미FTA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금년 하반기쯤 양국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최근 미국 목소리는 ‘한미FTA가 불공정하다,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말처럼 하반기나 되어야 미국이 논의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도 그랬고 당선자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셨습시다마는 이번에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정상 두 분 간에 만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FTA에 대한 실무책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우리가 선 비준 하면 미국도 비준을…… 선 비준 해서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재협상 요구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무리한 상정 시도로 국회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하반기 논의 발언은 정권교체와 경제위기 등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의 비준을 밀어붙였던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무책임하고 미숙한 외교적 판단력의 실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시

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FTA가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부속법이 따라 있습니다. 아마 2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론들을 내고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준비도 준비의 방법과 나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는 등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회에서 지난번 있었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아닌 상태로 FTA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정부로서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야 4당으로 이루어진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에서는 그동안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재검증하고 국내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농업 분야 대책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EU FTA에서도 양돈 등 농업 분야는 또 희생양이 됐습니다. 정부의 농업관심 참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총리, 농업은 단순 교역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유 의원님과 비슷하게 저도 농촌 출신 총리입니다마는 하여튼 FTA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농민이나 농촌이 부당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하여튼 정부의 한미FTA 보완대

책이 대단히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농축산물 피해보전 대책, 농지은행제 확대, 농산물 가공산업의 농민 위주 개편 및 참여 보장 등의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어서 넣은 것은 이제 농림수산부가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 산업까지 다 관장하는 이와 같은 부서로서 업그레이드되고 또 농촌이 1차산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와 같은 정부 조직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농수산부장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오로지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략적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 일변도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며 균형된 양대 축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래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상황을 준전시적으로 몰아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략적이고 메카시즘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인 전략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하며 가다듬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유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상은 의원 소개로 인천 동구 지역구민 오십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엇그제 북한은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기어코 불꽃놀이를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불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이를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은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무기와 적어도 300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를 커버하고 조금만 더 개발하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동강과 한강이 서해에서 만나 황해를 이루어 중국과 한반도를 하나의 커다란 경제권으로 묶어 놓은 지가 언제인데 우리는 한민족 간에 언제까지 서로 싸우며 살아야 하는지, 연평도 꽃게잡이 어부와 아오지 광산 막장에서 일하는 석탄 광부에게 이념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햇볕정책의 결과가 엇그제 장거리 로켓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족의 평화, 공동번영이라는 대전제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햇볕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햇볕정책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질서를 지키며 동참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기만으로 판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공과 과도 전부 현 정부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남측에서 북쪽으로 전달된 대북지원금 규모가 총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략 한 40억 불 정도 됩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6·15 남북대화 당시에 송금한 5억 불, 현대가 금강산사업 하는 사업권 다 포함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기에는 6·15 남북대화 당시 5억 불 송금, 그 액수는 제외를 하고 주로 인도적 지원으로 현물로 약 28억 6000만 달러, 환율을 1100대 1로 했을 때 약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만 금강산 관광 대가로 약 5억 6000만 불 또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 한 7000만 불, 현대 포괄적 사업 대가 약 4억 9000만 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로켓 개발해서 그것을 발사하고 개발한 비용은 얼마나 추측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썬, 그것은 추정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3억 불에서 한 5억 불 정도, 그러나 개발에 또 얼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은 의원 영국의 유력한, 저거 보면 개발비가 한 25억 불 정도 들고 이번 추진 저거 해서 발사에 한 3억 불 그래서 전체 30억 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하드 캐쉬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무역밖에 없는데 중국의 무역에서 들어온 돈은 대부분이 현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기름이라든가 식량으로?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하드 캐쉬 전체의 40억 불, 미사일 개발에 쓴 30억 불은 결국 다 우리 남한에서 올라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비용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을 수가 있으나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공한 그런 많은 지원이 또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박상은 의원 지난 3월 30일에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갖고 아직도 지금 풀려나지 않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우리 남북 간에는 어떠한 체류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이 이제, 기간에 합의한 그런 합의문서가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근로자를 갖다가 지금 풀어 줘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합의문에 의하면 조사를 하고 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또 접견도 허락해야 되는 거죠?

○통일부장관 현인택 거기에는 정확하게 북한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접견권과 변호권이 보장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원래 우리 경제계에서는 처음부터 이 3통이 안 되는 개성공단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사실은 중소, 대기업 이상은 여기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물론 우리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노동자를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주고 또 우리 노동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현재 이것이, 지금 결국은 개성공단의 한계가 도달한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문제점이 일부 노출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값’인데 우리가 ‘을’이 되어 갖고, 돈 주고도 뺄 맞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이 개성공단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렇게 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제 강국을 만들려면 2국 3체제, 그러니까 홍콩과 같은 모델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정할 생각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은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번에 런던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왜 이번에 한·EU FTA는 잘 될 걸로 봤는데 그 사인이 안 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금 두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5월 초에 다시 한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은 한·EU FTA가 잘 되면 한미FTA도 상당히 자극이 돼 가지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엇그저께 북한에서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미 말씀드렸듯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떠한 물체도 위성에 진입을 하지 않았고 또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의하면 2단계, 3단계 또 페이로드 탄두, 전부 다가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나 하는 논란보다는 우선 우리가, 유엔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발사체가 장거리 로켓이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프라하에서 기자회견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공위성 발표도 나왔었고 또 청와대는 유보한다고 얘기도 나와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미 간의 공조 내지는 정부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 4월 5일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국, 가장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의 발표를 보면 언론 설명자료에서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것을 확인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다음 줄에는 그것을 갖다 우주발사체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것을 우주발사체라고 썼다가 또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는 추진체가 바로 대포동 미사일에 쓰는 로켓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용어에서 저거저 우리 공조체제나 협조체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 발표만 해도 웹 사이트에 뜬 것에도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동 북한의 발사체를 ‘스페이스 론치 비히클(Space Launch Vehicle)’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곧바로 우리가 PSI에 전면 참여를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지요. 또 오늘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브리핑을 했고 또 어제 총리께서 분명히 시간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PSI에 참여하겠다고는 언론의 보도고 정부당국자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PS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됐고 그것이 구십 네 나라가 참석하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적 참가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러한 비확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 참가를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런던 G20 회담에서 보면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G20이 아니고 G2 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지요. 국제사회가 원래 냉혹한 겁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자주외교라는 것이 북한의 지원 없이 가능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의 뭐요?

○박상은 의원 자주외교라고 북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의 그러한 지원 없이 가능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북한은 에너지, 식량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스스로가 얼마만의 양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상당한 부분을 중국뿐만 아니고 여타 국제사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지금 북한이 경제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중국에의 의존도가 좀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볼 때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북한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결국은 우리 대한 정책이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도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서도 한중 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바로 그 얘기인데요. 한중 간에 국가에서 미국하고는 전략적 동맹관계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중국과는 경제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동반자라는 개념 또 그런 전략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멀쩡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중관계 또 한미관계를 어떤 제로섬게임으로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미관계의 발전이 한중관계에 마이너스이고 거꾸로 한미관계는 마이너스, 한중관계는 플러스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21세기에 있어서의 국제관계는 플러스섬, 더욱 발전된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된 한중관계를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중관계도 경제뿐만 아니고 범

세계적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군사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좀더 경제, FTA를 통해서 경제적인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범세계적 문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중국과 북한 관계는 중조우호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관계인데 결국 중국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금도 하려면 조금 더 안보분야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더 지나서 안보까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아쉽게도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최초로 한중 외교부 간 전략 대화를 차관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중국 관계가 계속 원만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좀더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관계가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바로 이 문제인데 제가 이따가 총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사일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의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G20 런던회담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잠깐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거기에서 6월 16일에 한미정상회담하기로…… 어디 미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난 4월 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갖는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어젠다도 대충 결정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젠다는 한미 동맹관계 발전방향 그다음에 한미 경제관계 발전방향 그다음에 기타의 동맹현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범세계적인 문제, 기후변화 또 재생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서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예,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한미FTA는 이번에 어떤 얘기가 거론되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한미 서로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아프간의 지원 내지는 파병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프간에 대해 지원한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고 앞으로 한미 양국이 좀더 아프간 재건 사업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또 한미동맹의 미래 또 전작권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한반도 안보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프간 문제, 파키스탄 문제, 이런 지역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는 소위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이라크에서도 우리 자이툰 부대가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우리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6·25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경제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ODA 기금을 좀 상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아쉬운 점의 하나입니다. 정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ODA 예산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유엔 반기문 총장 만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본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권유를 하려면 한국에서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많이 안 해 줘서 참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의 ODA 기여 규모가 GDP 대비 OECD 국가 평균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가 작년에 0.09%, 0.1%가 미처 안 났습니다. OECD 권장목표인 0.7%에 비하면 7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도 0.2~0.3%까지는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청룡부대가 소말리아 호르무즈해협에 도착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바레인에 도착해서 1차 정비를 하고 아덴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난번에 같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참 자랑스러웠는데,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2002년 6월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전사자들을 위해서 해군에서 나온 공식 메시지가 뭐 였느냐 하면 ‘조국은 여러분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에 도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외국으로 떠나서 장례식에도 참석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박상은 의원 그 당시에 상황을 다시 좀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상국 중사 부인이 그때 왜 한국을 떠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도 만나보고 또 언론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조국이 충분히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기념식을 매년 평택 해군부대에서 부대장 주관으로 했는데,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것을 정부 차원으로 승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그 당시 국내 진보·좌파 세력들이 인천—제 지역입니다마는—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운동을 굉장히 거세게 펼쳤습니다. 그 당시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뭐였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당시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맥아더 장군은 6·25 때 풍전동화의 상황에서 우리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장군이기에 때문에 그 자리에 당연히 위치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커뮤니케, 성명서가 나왔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군의 정신력, 안보의식, 사기는 우리의 무기체계 또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 10년 동안에 김대중·노무현 전 국군통수권자들이 북핵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들어 보면 2006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 어린이에 장난감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핵무기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크다”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없다” 또 시드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10년간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현역 군인들까지도 마치 이 땅에 평화가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안보의식을 약화시킨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난 시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여 우리 군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입대하는 장병들의 경우에 오도된 국가관, 역사관 또 안보관을 가진 장정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항상 그런 통일전선전략을 언제라도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은 그러한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고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환경에서 나온 것이 전작권,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회수’라고 하는데, 협상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원로 예비역 장성을 비롯해서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120개 단체가 1000만 명 목표로 해서 전작권 연기 서명운동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박상은 의원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들었을 때는 한 600~700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00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 입장은 뭐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전시에 증원 전력이 보장되고 또한 우리의 미흡한 전력을 보완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SCM·MCM에서도 합의하였듯이 전작권 이행 과정에서 그 이행 상태를 매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상은 의원 전작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국방부에서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나와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도 환율·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서 좋은데요, 4월 달도 3월 달에 이어서 흑자가 많이 예상되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실물경제 전문가이신 박상은 의원님께서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어제 보더라도 금융이나 외환시장도 많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역수지도,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흑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예, 아주 참 정말 좋습니다.

방금 전 통일부장관과 개성공단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에 조건지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 시점에서는 개성공단의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우리가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해 온다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문제들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도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대안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홍콩과 같은 2국 3체제, 그래서 경기만에 지금 간척지가 많은데 이쪽에다 우리가 경제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남북이 저걸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는 줄 압니다.

사실 경기만은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산업의 허브로 발전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그와 같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프로젝트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불행스럽게도 제반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이 되고, 개성공단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 존경하는 의원님이 제의하신 경기만 프로젝트를 정부로서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 외교, 특히 국가브랜드 향상에 대해서 총리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국가브랜드 향상, 이게 중요한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13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국가브랜드 위치는 33위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하고 브랜드 가치 사이에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여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윤대 전 고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문제를 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류 기업들의 브랜드 네임 못지않게 우리 국가의 브랜드 네임이 하루속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참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집안이 어려울 때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며느리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재상이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안보 위기 속에 많은 서민들과 기업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시대에 가장 화려한 경력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하루속

히 극복을 하고, 한 뒤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발전하는 이와 같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이와 같은 구상을 도와 드리고 보좌하고 하면서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더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총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저도 많은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많은 취약 서민계층, 지역 간의 갈등 등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해결하고 국력을 하나로 묶어서 다같이 국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중국과 일본은 더 군비 증강을 할 것이고 북한은 더욱더 거세게 위협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외교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긴밀히 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촉구합니다. 핵무기와 군비 증강은 결국 부메랑으로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루속히 민족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도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기에 정쟁에 몰입하는 패거리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여야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범관 의원 소개로 경기도 이천 지역구민 일흔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위험 수위에 달한 듯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안보에 관한 정책마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는 세계사에 대한 위대한 도전은커녕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4월 5일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 발사로 인해 북한의 MB정부 길들이기가 이제는 본격적인 남북한 힘겨루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어제 오늘 유엔 안보리가 모이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말하면서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민반응은 지양해야 할 것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미래의 통일 조국을 위해 차분하게 적실한 대응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도 세계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기와 절망을 딛고 전진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위기를 기회로,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의 민족사가 전개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고가 많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 1991년도 말에 남북 사이에는 참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것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유성엽 의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했고 또 불과 1년도 못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런 라인선상에 있었습니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됴으로써 사실상 북한 측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준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때 제가 알기로 남한에 있는 미군 핵무기 철수 또 팀스피릿 훈련의 중단,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북한의 국제 핵사찰 수용 이렇게 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는 이후에 남한은 주한미군의 전술 핵을 완전히 철수를 하여 비핵화되었으나 그 기간 중에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94년도까지의 그런 1차 어그리드 프레임 워크(Agreed Framework)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 비핵화선언이 준수될 수 없는 상황이 북한의 위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노태우 정부 때지요, 91년도 말이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남북기본합의서가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게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핵 문제 때문에 그것이 파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도 파기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북한이……

○**유성엽 의원** 아니, 남북기본합의서 자체가 그 당시 더 진행이 되지 않고 파탄이 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도 북한이 준수를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유성엽 의원**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핵 문제 때문에 파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파기가 된 것은 아니고 북한이 그러한 남북기본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조항들이 현재도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는 무슨 해이지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김영삼 후보, 그 보수세력에 의해서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 남북 기본합의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보수정권 탄생에 저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이 팀스피릿 훈련, 중지하기로 했던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남북 기본합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도

북한이 준수해야 할 합의서입니다.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저와 장관님 사이에.

팀스피릿 훈련 재개 선언이 남북 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를 파기하고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기를 하면서, 최근 3월 9일~20일 사이에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실시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것 말고 북한에서 나온 반응이나 조치들.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우리 개성공단이나 또는 남북 통항에 대한 위협을 하였습니다. 또 그와 같은 차단 조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습니다. 3월 9일 날 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또 3월 13일~15일 사이에는 육로 통행을 차단했고, 3월 17일 날 개성공단 입출입을 또 차단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키 리졸브 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 참여 병력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키 리졸브 폴 이글(Key Resolve/Foal Eagle) 훈련은 그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또 시기 면에서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대등한 훈련이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참여 규모가 얼마였지요, 기간과 인원?

○**국방부장관 이상희** 작년도 참여 규모도 제가 여기 현황을 갖고 있는데 대개 병력이 작년도에 한 2만 7000명 미군 병력이 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2만 6000여 명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것은 분명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키 리졸브 훈련 등을 통해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

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에서는 보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거기에 대한 반발의 기미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제에 이런 키 리졸브 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는 군이 존재하는 한, 또 한미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군은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그것이 한국군 단독 훈련이든 또 연합훈련이든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시행이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기간이나 인력 면에 있어서 그것이 확대가 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아야 할 이때에 그렇게 가는 것은 북한을 대하는 현명한,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매년 실시하는 훈련을 가지고 북한이 그 시기에 그들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트집을 잡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런 위기가 고조되어 가다가 참 불행하게도, 원하지 않게도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장관?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엽 의원** 만약에 불행하게도, 원치 않게도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런 위기가 최고조로 다다라 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 연합작전 태세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군은 역제에 실패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불행하게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제를 해야 될 일이지 만 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의 승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남과 북 사이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위기를 고조해서 불행하게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군에서 사전에 튼튼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그 대비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군사훈련 등 이런 부분은 세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과 불필요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극한적인 위협 어구를 써가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합훈련 또 심지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0년대 이후 남북 관계의 변천을 살펴보면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91년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이후에 2005년도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고 급기야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북한은 분명히, 핵실험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성공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된 바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6년이고 지금 벌써 3년여 세월이, 횡수로 3년의 세월이고 엇그제 로켓 발사까지 지금 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사이에 2006년도의 북한 핵실험이 성공한 거냐, 성공하지 않은 거냐라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완전한 성공을 했는지는 평가를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장관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물론 대내외적인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체제 내를 단속하려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안보적으로 위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물론 있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대미협상을 증가시키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성엽 의원** 그 일련의 흐름을 볼 때나 옛그제 로켓 발사가 있었지만 우리들 아주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 불감증 아니냐 할 정도로 전혀 우리 국민들 동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국민은 성숙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분명히 우리 남한을 겨냥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거리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로켓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런 어떤 침착함, 이렇게 조용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핵,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왜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핵에 대한 대책, 또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들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어떤 체제의 인정을 위해서, 또 불가침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대북 경제제재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얻어내기 위해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

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아까 그 어떤 체제의 안정과 안보불안 해소, 경제적인 제재의 해소 같은 것을 위해서 만약 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핵 개발에 있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그 비중을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성엽 의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저는 정확한 핵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적실한 길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최근에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옛그제 질문에서도 나왔고 오늘 질문에도 나온 대로 과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어떤, 연계돼서 봐야 할 것이냐, 병행해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관께서는 답변을 오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제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가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전제적인 것은 아닌데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절충적인 병행론으로 봐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연계론이나 아니면 병행론이나 이러한 논리는 일부 학자들이 개념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주장은, 물론 그 사태를 좀 명확히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단순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떻든 이 핵 문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핵 문제의 굴레에 갇혀 가지고 남북문제가 정체가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적정선에서 분리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

어가했습니다.

6·15 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나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 정상 간의 남북 관계의 기본방향을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고 향후 협력사업들의 추진의 향을 담은 그런 선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그걸 이행할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이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행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전 질문과 답변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분명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기존의 모든 남북 간의 합의,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특히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이 대화를 위해서 모든 창구를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까 총리께서도 “항상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국 같아요. ‘문을 열어놓고는, 열어놓고 있는데 담 뒤에다가 무기, 몽둥이를 숨겨놓고 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화의 문을 저희들이 열어놓고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 정부로서는 그런 대결적 자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북한이 그 담을 넘어 대화의 문을 들어오기만 하면, 그럼 된다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남북 간의 상황, 경제협력 실적이라든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실적 또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실적 등을 보면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금강산 관광사업 또 개성공단사업이 정체 내지는 보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기본 원인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난,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1일 금강산 총격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북한이 계속해서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개성공단의 차단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로켓 발사 문제 등 그런 대화가 지금 열리지 않는 관계로 남북경색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의 제스처를 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원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강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정부의 진지한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입출경 차단에 대해서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다. 남북 합의 위반이다’ 하면서 북한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대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금강산 출입에 관한 기본합의서, 이 합의서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합의서는 남북이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다만 이 문제는 그 합의서에 따라서 북한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지난 개성공단의 차단 조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 남북 간의 이런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그런 차단조치를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성엽 의원** 이 말을 붙이면서 우리 장관께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그 합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근거를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 우리 남한 정부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

를 보이고 있는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까 개성 출입에 관한 합의서 위반만을 북한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책임 전가를 북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썽 그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장관도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한 그…… 더 이상 어떻게 그 진심을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수고하십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어제 서울시간 새벽 4시에 제1차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2차에 걸쳐서 P5라고 그러는 상임이사국하고 일본, 이렇게 여섯 나라가 비공식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결론이 도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각 수도에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은 것,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각국의 견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들 그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견해를 같이 하는데 그 제재, 논의되는 제재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합의가 못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수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새로운 추가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1718호 제재 결의안을 다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안보리의장 성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보리의장의 언론 설명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

해운합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PSI에 가입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그 PSI하고 남북해운합의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 간에 선박의 항행을, 항로를 정해 가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북한 선박이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동해 항구에서 서해 항구로, 또 서해 항구에서 동해 항구로 지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PSI, 이것은 어느 나라와 어느 특정 지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무기를 선적했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선박·항공기의 개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항공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유성엽 의원** 남북해운합의서로도 북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북한이 서쪽 항구에서 동쪽 항구로 가면서 거기에 위험 물질을 싣고 항해한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PSI에 가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험 무기의 운반, 또 수출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정식 가입해야만, 오퍼레이셔널 엑스퍼트 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이라고 해 가지고 작전 전문가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야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PSI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영해상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전혀, 거꾸로입니다.

○**유성엽 의원**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PSI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는 PSI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공해상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박, 소위 무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고, 그것은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선박을 점검해도 좋다는 그러한 양자 간 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공해

를 지나가는 어떠한 선박도 PSI라고 해서 임검할 수는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들이 우리의 영해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공해상으로 해서 북한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우리 영해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은 우리 영해를 거치지 않고 가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없는 것이지요, 거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 PSI를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해서 북한을 이렇게 자극하고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의원님, 북한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소속해 있는 선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WMD를 확산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 PSI에 대해서 하등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질문했을 때.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PSI에 가입해도 북한에 대해서 별로 제약도 될 수 없는 일을, 왜 자극만 주고 반발만 사면서 실효성 없는 짓을 하느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PSI는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규범, 94개국이 가입한 전 세계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반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왜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왜 반발을 하든, 이유 있는 반발이든 이유 없는 반발이든, 실효성도 없이 반발을 자초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분위기,

긴장 완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북한을 의식해서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성엽 의원** 북한과 우리 남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드렸던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재협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재협상 논의는 현재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지금 재협상 문제를, 우리 쪽에서 그것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재협상 문제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난번에 런던에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마치 한미FTA가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나왔다가 그 후의 미 관리들 발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분의 조정 없이는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협상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재협상이라는 것은 기존의 협상을 무효화하고 다시 협상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 버려 가지고, 총리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늦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미국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의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약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이 표에서 우려하는 것은 엇박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대통령과 그 상대방, 그 시점에서의 상대방 미국 대통령과의 엇박자 문제,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에 참 크게 소모적인 작용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

마 미국 대통령은 런던에서 정상회담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화로 통화가 있었고 또 양국의 정책에 있어서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핵 보유 문제라든가 미사일 개발 같은 것, 확산 같은 것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 해서 앞으로 두 분간의 관계는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6일에 워싱턴에서의 회담도 제가 보기에 는 엇박자 없이 두 분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미동맹 관계도 굳건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일치를 했을 때, 맞았을 때 그러니까 2000년도 6·15 선언이 나온 것이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참 역사적인 6·15 선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만한 환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 저희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 6·15 공동선언이 나올 만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나라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피주기 10년이다’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의 성취를 폄하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시 정부와의 파트너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부분이. 그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성취를 이루어 낸 것은 크게 평가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10년이다, 피주기 10년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저는 부시 정부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많은 남북 간에 있어서의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 냈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그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이 만일 그것을, 저희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를 하고 있고 한테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남북 관계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 5년, 10년 동안에 피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어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물질·현금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좋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서는 올바른 대북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문희상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법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관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천 여주 출신 이법관 의원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 최근의 북한 도발행위는 국내에서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고, 북한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정책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정책 목표가 ‘평화적 통일’이라는 데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 증진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 제재·압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이 혼동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는 대북 지원과 남북대화, 그 자체가

대북 정책의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막히거나 중단이 되면 아주 조급해했어요. 또 북한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압박하는 이러한 정책 수단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런 믿음에 빠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치 ‘반통일, 반평화 또 전쟁불사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 세우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이법관 의원님, 저는 이분법적 사고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하여간 지난 정부 10년의 대북 정책은 성과가 과(過)도 있고 또 대화를 진전시킨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진 과정에서 원칙이 훼손이 되고 또 이념적이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가지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원칙은 견지를 하면서 그러나 상황에는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위한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좋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고 또 북한이 달라는 것 다 줘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니까? 북한의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이는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가 양적으로는 발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이 우리가 끌려 다녔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우리 정부가 바라고 싶은 대로 또 우리 장관님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참 답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이 마치 처음 발생한 것처럼 ‘대북 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서 빨리 대화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새로운 정

부가 출범할 때마다 북한은 비슷한 행태를 여태까지 취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영삼 정부 시대를 봅시다.

북한은 NPT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을 쏘는 등 비랑끝외교를 펼치다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 동결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받아 냈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봅시다.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평해전 도발하고, NLL 무효 선언을 하는 등 대남 강경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 후에 남북정상회담을 받아 내 필요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제2의 연평해전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로 남북 관계를 북한이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대를 봅시다.

남북 관계에 대화가 중단되어 오다가 또 대포동 미사일 쏘고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을 압박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뭐 한 건 하려고 정상회담 하면서 필요한 것 다 주어 버렸어요, 북한에다가.

장관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지금 북한이 구사하는 전략도 과거 행태와 똑같습니다. 비랑끝 전술과 허장성세를 통해서 이목을 끌게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협상 테이블로 자기들 필요하면 나와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는 이런 지그재그 행보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개성공단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행태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꾸어 보고 싶고 또 단단한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의 북핵을 인정받고, 미·북 수교도 이루고, 김정일의 후계 구도도 완성하려는 아주 복잡하고 다원적인 치밀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노리는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법관 의원**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왜 6·15 선언 이행 안 하느냐?’ ‘10·4 선언 이행 안 하느냐?’ 그러는데 다 들어줘 봅시

다, 우리 그거. 그런다고 북한이 핵 포기하겠어요? 미사일 안 쏘겠어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6·15 선언, 10·4 선언의 문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여간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화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법관 의원**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지요? 북한이 그것 다 들어줘도 지금 핵 그대로 다 갖고 있고 미사일 또 쏠 겁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제2의 핵실험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연평해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대화의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남북대화가 잠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조금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어쨌든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방안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아까 장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 인권 문제, 납치 문제에 입을 다무는 등 북한에다가는 말을 못 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만족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등은 북한 인권 문제, 납치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원칙에만 목매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남북대화가 가능한 틈새가 무엇인지를 좀 찾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가 그 기회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라고 봅니다.

○**이법관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국장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실태를 조사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한 정부의 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정말인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법관 의원** 본 의원은 이 발언에 주목을 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는 애착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육로 통행 차단 등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민 여론이 또 갈라졌어요. 소위 진보세력은 ‘비핵 개방 3000 폐기하라’ 또 보수세력은 아예 ‘개성공단 폐쇄하라’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국론을 좀 합일되게 국론을 모아 줄 수 있는 책무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 국면이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북한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기도 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정부가 대담하게 나서서 ‘자, 개성공단 활성화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2007년 11월에 남북총리합의서를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기숙사 건설, 도로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법관 의원** 이런 내용은 남북 간에 큰 이견 없이 진척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도 역시 상황적인 그

런 것에 영향을 물론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차단 조치도 취해진 바 있고 이번에 또 로켓 발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장관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입장인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제안을 대통령께 한번 좀 건의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도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말로만 대화의 문 열어 놓았다고 하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이 아마 발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행을 서로 해야 한다는 그런 합의와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북한이 거부할까 봐, 또 그 반응이 두려워서 제의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못 잡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남북대화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잡을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제의하면 설사 경험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명분은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4일 국방부가 특전사를 이천으로 이전하면 특수전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재검토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은 없고 다만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이것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법관 의원** 조금 물려서신 것 같으네, 좀 말씀이. 좋습니다.

국방부가 2007년 8월에 제작한 홍보 자료를 보면 “이천 주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

랬어요. 이 책자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법관 의원** 이 책자에 보면 “이천 주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성남공항에서 이천 지역까지 유사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이천 시민들이 특전사 이전을 반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2007년 4월에는 국방부가 이런 폭탄선언을 했을 때 과격 투쟁하는 수밖에 없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가,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얘기를 다 들어 주겠다 이렇게 설득한 사실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것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특전사 이전사업은 이천 시민들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백보를 양보해서 희생하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3월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 10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 4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그 이후 이천시, 토지공사, 국방부 간에 실무 협의를 거의 매달 개최해 왔습니다.

그 실무 협의 결과를 장관, 계속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주요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법관 의원** 장관이 당시는 합참의장이었을 때라고 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05년 8월에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발표되었고 그 안이 확정될 때까지 군의 작전적 검토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법관 의원**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에 이 특전사 이전 재검토 문제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나 인수위에서 모든 사항을 다 리뷰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제기한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천에 토지보상금의 약 70%, 1800여억 원이 지급됐고 송파신도시 보상금까지 합치면 무려 1조 4000여억 원의 혈세가 지금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데 지금 재검토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국방부장관 이상희** 70%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지금까지 문제시하였고 또 작전 수행 등을 위하여, 수도권 안전을 위하여, 또 전시에 전방으로의 지원을 위하여, 또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위협과 또 특수전 병력들이 저희 국방백서에 봐도 상당 부분 증가되어 있고 또 세계의 여러 대도시에서—우리는 2300만 도시를 갖고 있는데—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넓은 수도권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훈련된 부대가 그때는 필요합니다. 또한 이 훈련된 부대가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헬기로 1개 대대 또는 2개 대대가 즉각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들이 구비된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아직 공사가 발주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국방부의 의견을 검토해달라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법관 의원**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이런 지금의 안보환경하고 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볼 때 서울공항에서 2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천에서도 충분히 특수전 임무가 가능했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장관님 말씀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재검토 요구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가, 그러니까 즉 특전사가 또 3여단이 이천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천에는 군부대가 오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협의하더라도 또 국방부가 협의를 요청한 이러한 사항이 채택되더라도 이천시민이나 이천시에는 전혀 군부대가 그쪽에 이전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다른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법관 의원** 그럼 이천시민은 국방부에서 할 때까지 하늘 쳐다보고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이법관 의원** 그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빨리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그것 언제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가부 결정을 언제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법관 의원** 그래도…… 그럼 마냥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토해양부와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하십시오. 저 시중에 나가서 백사람 놓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말이지요. 국민에 대해서 할 일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천시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한 보상금이 적어도, 이번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와 토지공사가 택지지구에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손해 보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이 사업 때문에 이전해야 될 조상의 분묘가 1100여 개에 달하는데 이것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시 갖다가 또 어디로 옮기란 말입니까? 이것 국가가 이 후손들에게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일입니다.

또 주민들의 생업 기반인 농업이나 축산업을 반강제적으로 포기시켜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이천 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간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방부가 이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천 주민과 또 이천시에서 아주 적극적인 협조,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협조를 해 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돼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보자 하는 그러한 국방부의 의견

인 것입니다.

○**이법관 의원** 이천시도 말씀이지요,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 놨어요. 이런 사실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법관 의원** 이천시민들의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지금 물질적 피해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천의 민심은 애초에 반발할 때보다도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극렬한 반대 투쟁이나 대규모 소송 사태가 나면 국방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이천시와 시민의 요구를 잘 고려하여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믿고 국가사업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별 추측이 다 나옵니다,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상하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허가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는 기존 비행장에 대한 어떤 작전성, 안전성 검토의 결과이고, 이것은 부대가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 투입될 훈련된 특전사와 3여단이 바로 거기에 헬기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삼풍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의 전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삼풍 사고 현장에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오로지 헬기에 의하여 지금 정보사 연병장에 병력이 투입돼서 거기서 도보로 투입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2300만 수도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헬기로 훈련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법관 의원** ‘남성대골프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남성대골프장은 의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거기만큼 재미없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완전 평지입니다. 업, 다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헬

기 착륙장이고 전개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성대 때문에 그런다는 오해는 갖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관 의원** 누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남성대골프장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장관님께 남성대골프장 대신 그 옆에 미군 골프장 있잖아요? 그거 쓰고 그런 허튼짓은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국방부장관 이상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성남골프장은 업, 다운이 심해서 헬기가 한 대도 거기 내릴 수 있는 홀은 없습니다. 그 용도가 다릅니다.

○**이법관 의원** 아니, 골프장을 꼭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미군부대 골프장 쓰면 되지 남성대골프장 보존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골프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관 의원** 또 국방부가 서울공항 주변 성남 시내에 45m 고도제한을 걸어 뒀는데 롯데월드는 555m를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과 후방이 없고, 국방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서울공항에서 25km밖에 이천 지역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국방부의 논리였습니다, 그게. 그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좀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하나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천시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방부와 정부 당국의 책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이법관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이법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 전남 목포 출신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총리님 좀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반갑습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 ‘실세 총리’라고 스스로 자평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길래 총리실의 실세는 당연히 한승수 총리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좋습니다.

실세는 국민이 알아야 진정한 실세입니다. 잃을 실(失) 자, 실세가 되지 마시고 총리로서 소신껏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충고를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또 오늘 답변도 분명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두고 미사일, 로켓, 인공 위성…… 주장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박지원 의원 왜 그렇게 혼선이 많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발사체는 로켓이지만 그것이 위성으로 대기권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박지원 의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 하나 정리 못 하고 조정도 못 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박지원 의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처음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인공위성 발사 시도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미사일이라고 고집하다가 기자들이 강력하게 지적하자 로켓이라고 바꿨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즉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를 했다가 미국에서 다시 발표하는 외교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미디를 이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총리께서는 대통령 보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거리 로켓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발표가 계속 혼선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총리님의 정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초기 대응부터 왜 이렇게 정부가 서투르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 북한이 로켓 발사 3시간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한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알기에는 3시간 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로켓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더 정통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최소한도 미국으로부터 북한 로켓 발사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잘 모르고 ‘외교통상부장관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세 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실세 그것보다는……

○박지원 의원 미국으로부터 4월 5일 아침 9시 반경에 ‘11시가 조금 지나서 발사한다’ 이런 통보를 우리 정부가 받았습시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통보도 못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마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어떤 통보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못 받았습시다. 저보다 모르시면 곤란하지요.

일본은 로켓 발사 전에도 발사 후에도 허위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강경 발표를 했다고

지적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일본의 경우입니까?

○박지원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일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발사를 4일 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NHK가 오보를 낸 것으로 판명된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박지원 의원 그것을 LA타임즈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에는 통보를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서 로켓 발사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통미봉남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북한이 1998년 또 2006년에도 로켓 발사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사전에……

○박지원 의원 왜 북한이 미국에는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 봉남통미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함부로 쓸 일이 아니고 98년과 2006년에 북한이 이와 같은 로켓,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우리 정부한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께서 지금 변명을 하셔도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변명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 국민은 미국에는 북한이 통보해 주고 우리에게서 아무 소리 안 해 준 것이 통미봉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통미봉남은……

○박지원 의원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잘 공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우리 외교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완전하게 왕따를 당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틀린 정보로 우리 정부가 춤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춤 춘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지원 의원 춤을 제발 좀 앞으로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런데……

○박지원 의원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지원 의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한국 정부를 속이고 거짓으로 강경 발표를 해서 국제적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소 정권 차원에서는 소기의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소 정권이 이번 사태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일본에서는 분석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서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지원 의원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총리만 모르시는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일본 신문이랑 TV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실패한 대북 정책, 실패한 외교라고 정리를 합니다.

로켓이 발사되자 진보적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새벽 4시 반에 즉각 일어나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나무를 심으셨다는 라디오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가롭게 골프를 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심고 바로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명 발표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안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2롯데월드를 진보정권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국방상의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관계자들의 절대적인 강력한 반대에도 허가한 것과 참으로 이상한 비교가 됩니다.

과거에는 휴전선에서 ‘탕’ 소리만 나도 우리 국민들이 쌀과 라면을 사재기했습니다. 이제는 로켓을 발사해도 우리 국민은 민생에 전념하고 대통령께서는 나무를 심으시고 집권여당 한나라당 대표는 골프를 치십니다. 상황 변화가 민감한 증권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성숙해졌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총리님,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국민의 성숙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라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관계는 지금 펀더멘탈이 여러 가지로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반응이 없이 4월 6일에 좋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것은 바로 햇볕정책의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햇볕정책을 가장 비판하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방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G20 출발 전에 파이낸셜타임즈와 회견에서 ‘군사대응을 하지 않겠다,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특사도 북한이 받아들이면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즉각 열렸지만 오늘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진행과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로켓 발사 책임을 묻기 위해 단독 제재라도 추진할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골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하루속히 개최돼서 북한 핵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번 총리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단독 제재를 하지 않고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좋은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총리께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개성공단입니까?

○**박지원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개성공단은 우리가 남북 경제협치의 좋은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남북 경제색을 일으킨다든가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한 업체는 북한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입주 업체들이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기숙사 문제는 지금 공단 관계가 북한의 자의적인 그와 같은 정책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화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에 건설하지 않는 이유가 집단 활동의 염려라고 말씀하신 것을 총리께서 잘 좀 건의해 드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정부가 PSI는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현재처럼 부분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인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은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시기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PSI는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도 과거 부시정권처럼 PSI에 강한 입장이 아니라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은 오늘 보도에 의거하면 MD 예산마저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보도에 의하면 MD 관계를

축소한다기보다는 아마 재조정할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의 함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슬람 모든 제국과 대화를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외교 전문가이신 총리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세워 놓고 검사하면 북한 선박이 순순히 응할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PSI는 영해상이지 공해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영해상에서요. 영해상에서 하면 북한이 순순히 응할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남북 간에는 해운협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해운협정을 준수하기로 또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신용등급 하락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할 때마다 0.35%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 외채 2000억 달러의 0.35%는 7억 달러, 약 1조 원의 추가 금융, 즉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민간기업으로 이어지면 손해는 더욱 커집니다.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총리께서는 경제를 위해서도 PSI 전면 참여가 부당하다고 대통령님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상인데 북한을 지목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결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 지금 총리께서 PSI는…… 제가 묻는 것은 대북 문제인데 전 세계를 향한다고 하면 국민이 웃습니다. 좀 진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박지원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

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제가 전 세계를 향해서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PSI는 대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승수 PSI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공조를 통해 PSI에 참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PSI가 북한만 놓고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박지원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대북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좋은 실력으로 국민 앞에서 언어로 회롱하면 국민이 화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언어로 회롱하는 것이 아니고……

○박지원 의원 총리께서는 방금 답변에서도 PSI는 전면 참여하겠다, 시기만 남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지원 의원 부디 PSI 전면 참여는 검토만 하시고 시기는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의 국방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알 수 없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지원 의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정보위에서의 보고는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작년 동 기간보다도 4배의 대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고 합니다. 최소한 북한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알고 계셔야 총리가 옳은 국정을 하시는 겁니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 뼈라 10만 장이 바로 어제든 북한 돈 5000원 권 400장과 함께 살포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검찰은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대북 뼈라 살포 현장에는 단속하는 공무원 1명 없이 버젓이 북한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이 불법인 북한 돈을 소지하고 용산참사 유가족이 북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뼈라 살포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도 계시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대북 빠라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부에서는 꾸준히 권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에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삼가도록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 계속 총리께서는 동문서답하시는 겁니다. 북한 돈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베이스 외로 소지하면 불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세계에 약 20여 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몇 개 발사했고 현재 활동 중인 인공위성은 몇 개가 되는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

○박지원 의원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를 발사했고 약 4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우리나라 기술이지만 발사는 외국에서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면 세계에서 북한은 열 번째 인공위성 발사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인공위성 발사 국가가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과학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훨씬 답변하기가 나올 줄 압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지금 고흥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을 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이것에 전념한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한 수준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산업상의 기술 문제 때문에 기술력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께서 파악을 좀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정대로라고 하면 금년 7월 달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

터에서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잘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정책이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허용하면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대표도 이번 북한 움직임에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북한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프라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을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는 이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얘기를 안 했던 것이지요.

○박지원 의원 부시 대통령의 6년간 실패한 대북 강경 정책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했고 핵실험을 초래했으며 드디어 이번 로켓 발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실패한 부시 정책을 따르지 말고 성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줄 것을 권고해 주시라고 총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2001년으로 압니다마는 1998년에,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박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김충환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인 강동구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어머니봉사단들이와 계십니다.

김낙성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구인 충남 당진군에서 많은 어르신네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성동을 출신 김동성입니다.

저는 아까 박지원 의원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5일 김정일 정권은 전 세계가 거듭 반대했음에도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는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도발을 억지할 강한 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대화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소불가침조약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뮌헨 협정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온갖 거짓으로 유럽 각국을 속여 평화를 위장하였지만 결국 히틀러를 제압한 것은 미국과 유럽 각국의 모아진 연합전력이었습니다.

이번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 위기에도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1718호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동성 의원**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짧게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됐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단체에 수출할 경우에는 세계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한반도 동북아 안전에도 위협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김동성 의원**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유사시 미국의 안보 지원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게 되면 자칫하면 하와이나 미 본토까지도 공격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로켓실험은 저는 반드시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로켓 발사……

○**김동성 의원**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는 당초에 김정일 정권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요격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요격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발사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태평양 한 중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게이츠 장관이 미국 기자들 2명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 비겁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위협에 굴복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의 미국의 굴복행위를 보고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때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던 소련의 의지를 꺾고 위기를 해결한 것은 당

시의 케네디 미국 대통령께서 ‘핵미사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해결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저는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하려고 했을 때에 그 전에 ‘발사를 하면 요격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로켓 발사 기도를 저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반대로 ‘군사적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6자 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개성공단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군사도발을 조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정책적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실제로 김정일 정권이 로켓을 발사할 때는—이번에 했지만—이것을 요격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여 가면서까지 거액의 돈을 들여 미사일 개발해 봐야 한미일의 견고한 MD시스템에 의해서 무용지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어야 김정일 정권의 기를 꺾고 차후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를 유지했고 대통령께서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계체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대북 설득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결국 로켓을 발사했고 이 점을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그리고 저는 차제에 미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시스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창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다면 우리로서는 미일과의 MD시스템에 동참을 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MD체제에 가입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 및 미사일 해결에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MD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상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요격

을 하겠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 미사일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67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을 가진 적에 대해서 칼로 대항을 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서 사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PSI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부분을 확인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총리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하고 북 간에, 그리고 북에서 북으로 선박이 운송될 때는 적용될 수 있지만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이 해운합의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을 위해서 남북해운합의서상의 항로대를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는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렇고, 여러 차례 나왔지만 PSI는 94개국 가입한 이미 일반화된 체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PSI에 가입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엔해양법 규정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은 기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가 PSI에 참여하여도 북한 선박을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문검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검문검색을 강제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총리께서 알고 계신 PSI의 사례 중에서 강제로 검문검색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의 수송을 차단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PSI 사례는……

○김동성 의원 강제로, 강제로 검문검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003년 10월에 원심분리기를 싣고 리비아로 향해하던 독일 선박 BBC 차이나호를 인근 이태리 항구로 회항을 시켜서 검색해서 차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것은 회항을 시켜 가지고 협조를 받은 것이지 강제로 검문검색을 하고 압류하고 한 게 아닙니다. 기국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강제 검문검색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례들을 죽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사례들이 PSI의 사례들인데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로 검문검색을 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전쟁 발생 가능성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견해라고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정확한 수를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2000년 이전에는 한 1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한 3~5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지금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 국민이지요, 물론.

○**김동성 의원** 그러면 탈북 여성의 경우에 그 사람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동성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조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헌법에 따라서 탈북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완전히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전원 수용하고 체

류 여건 개선하고 보호·지원을 위해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젊은 탈북 여성들이 조선족이나 중국인 남성들에게 성 노리게 또는 한국행 티켓으로 팔아넘겨지고 있는 그런 인신매매가 많은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젊은 여성들이 팔려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직접 하나원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 돈 5000원, 요즘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중국 돈 2만 원—이게 최고 가격입니다—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공안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주 탈북자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단속은 대단히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공안 단속이 매우 잦고, 특히 연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를 통한 강제 복송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중국 정부가 이걸 비공개로 처리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알려 주는 것만 파악할 것 같으면 우리 국정원이며 무관이며 왜 필요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국 당국에게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할까,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저희들이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지역이 광활하고 나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이 탈북했다가 북송되어 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탈북자가 북송이 되면 굉장히 상당히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저는 인터뷰를 제가 직접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북한의 보위부 직원들이 여성의 자궁에서 항문까지 손을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숨겨 놓은 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탈북 횡수에 따라서 교화소에서 수년간의 노역을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도 시킨다고 하지요. 때로는 공개 처형도 시킨다고 합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이것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의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민 단체들이 3만 명 이상은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이 숫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 아이들 또한 분명히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국적자로서 의료 및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동 매춘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소재의 각국 공관들의 경비 상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성 의원 맞습니다. 중국 공안이 철통같이 지키고 공관의 외곽 담장은 전기 철조망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탈출 방법을 지금 못쓰고 있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안의 삼엄한 경비와 밀고자들 그리고 밀림을 뚫고 동남아시아 각국을 거쳐서 1만km의 목숨을 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바로 그 탈출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탈출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또 죽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인터뷰한 분은 6명이 탈출 했는데 2명이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탈출 도중에 검거되거나 지금 사망할 겁니다.

이 탈북자들이 탈출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난민보호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탈북자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동남아의 난민보호시설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한마디로 매우 열악합니다.

본 의원은 탈북자들이 탈출 루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당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비용 지원을 좀 해서라도 난민 보호시설의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일부 국가의 수용소 과밀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자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탈북자의 해외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몇 가지만 추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않도록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NGO들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탈북 인권 전담기구가 없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합을 해서 담당하는 북한인권문제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리고 대북 전단지 배포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물론 대북 전단지를 뿌림으로써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접경지역의 군인들한테 남한의 실정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고발까지 해서 처벌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탈북자들 인권 문제는 제가 정말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어떠했습니까?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본 의원은 북한 인권법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에 태어난 동포들도 헌법상 분명히 우리의 국민입니다. 못난 나라에서 태어난 천형 때문에 현대판 노예가 되어 이역만리 타향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만 일관한다면 죽어서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선조들을 뵈면 목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이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조국이 결코 이들을 잊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수가 설사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 하더라도 최후의 1인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오늘의 위정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의 법정에서 민족사의 죄인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동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막상 이렇게 나서 보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감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민의의 전당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큰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또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집권 경험에 바탕한 경륜을 갖추었습니다. 또 자유선진당에서도 국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와는 다른 국회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18대 국회 역시 과거의 국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고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라는 안보위기로 대한민국이 이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정세는 그야말로 엄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위기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비장한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라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참여 결정과 유엔 안보리 제재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거리 300km 미사일에서 1000km 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일본과 함께 미사일방어체계 즉 MD에 참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으며 2개의 핵탄두를 지하 핵시설에 보관하고 있다는 국제위기그룹의 발표가 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핵탄두를 갖고 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성공했다면 이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입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합의 등은 언제나 무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3년 북한이 NPT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하면서 우리에게 '전쟁불사' '서울불바다' 등으로 위협하면서 94년에는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경수로 지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은 배제된 채 북·미 간의 일방적인 약조였으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떠안게 되었고 결국 어마어마한 국고만 낭비한 채 경수로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약 1조 4000억이 투입된 경수로사업은 이제 고

철덩어리가 되었고 2015년 만기인 경수로 관련 국채발행액만 6조 479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작년 8월까지 겨우 2조 9498억 원을 갚았고 200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지급된 국채 이자만도 6000억에 달하며 2015년까지 추가지급 이자액만 1조 135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엄청난 국고낭비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에 대한 책임논의조차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과정 전반과 국채발행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과 우리를 배제한 직접적인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는 북한의 수법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1998년 대포동미사일 1호 발사 실험 시에도 똑같은 수법을 통해 미사일 수출 중단 보상액을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했으며 2006년 핵실험과 지금의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즈워스 전 대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요구, 방북 희망 등으로 볼 때 또다시 94년과 같이 우리를 배제한 채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될 조짐이 보입니다.

다행히 4월 2일 런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할 시 한국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걱정이 앞섭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또다시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간 직접대화를 해서 94년 경수로 합의와 같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미 간의 철저한 사전논의나 합의 후 북·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 현재도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한미관계를 결코 이간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관해서 한국이 제외되었던 것으로 이렇

게 자꾸 말씀들 합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주미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네바에서 한국 우리 측하고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하코의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 핵 폐기 또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하고 북한 동포 굶주림 이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때 항상 자기네들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6자회담 시 나온 9·19공동선언에서도 체제보장을 해 준다면 핵 포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체제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 체제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방송매체 등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핵 위협의 제거, 평화협정을 계속 체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제보장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춘식 의원** 그런데 북한이 체제보장이 되면 핵 폐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내용이 뭔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6자회담의 제3단계입니다마는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 북한의 국제사회의 입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호전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이 되고 또 북한 주민의 소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와줘서 3000불이 되고 또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되어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혁명 1세대와 지금의 김정일을 비롯한 이런 지도부가 계속 북한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것이 체제보

장이 아니냐, 또 실제로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을 해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베트남 또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과거 공산국가들이 개혁·개방을 해도 과거 구체제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물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체제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춘식 의원** 그런데 북한이, 저도 미국 학자들이나, 미국에서도 보고 9·19공동선언에서도 체제 보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장관님, 북한 이탈 주민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이 전 정권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존경하는 이춘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인도주의 문제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을 2개월에서 최근에 3개월로 늘렸고 시설도 현재로서는 하나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대비해서 제2 하나원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각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지역에 적응센터, 하나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3개소를 개설을 했고 내년엔 15개소

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모두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고뇌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원 교육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센터에서 지역 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빈손으로 청소부, 노점상을 하면서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같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나라이고, 이북 출신으로 맨손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드신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점을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잘 알려져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과 함께 정부도 관심과 애정이 남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착지원금 중 주거지원금을 빼고 나면 정착준비자금 쓸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월 생활지원금의 경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 대환을 찾아왔는데 길도 모르고 물가도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일정액의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 취득을 하거나 또 취업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 2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착금의 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에

또한 많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립·자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건전한 대북관 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이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이수자로서 하여금 정부정책을 근간으로 통일교육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이춘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통일교육 활성화와 특히 청소년의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등 협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정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님.

장관님,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아까 김동성 의원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제가 중국대사관에 가서 물어볼 때는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만나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통계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정말 공포—강제송환을 당할까 봐—끓주림,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촉구한다, 정치범과 송환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지적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지금 중국 내에 있는 분들 말합니다—이분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한 난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기본적으로 난민지위에 있는 지역은 체약국, 그 당사국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HCR이 중국에서는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매번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의원 예, 그래서 중국이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난민협약을 보면 강제송환이 금지되어 있고 추방되거나 본국으로 송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강제송환시키고 북한에서 처형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 장관님께서 역량을 강화해 줘야 되고, 지금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모든 국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도 개최했고 세계 외환 보유 1위이고 우리나라와는 5000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우호국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난민 지위 획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로서도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최소한 탈북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춘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춘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규백 인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천하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롭고 해로움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옳음을 지키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손해까지 보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입니다.

지난 5일 국제사회를 뒤흔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 정치·군사적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군사행동입니다.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대응은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발언의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던 대통령의 말씀이 PSI 참여로 귀결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요한 정적만 감도는 철책 앞에서 스무 살 청년을 유보한 채 북녘 땅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 초병에게 국방위원으로서 미안할 뿐입니다. 성남 시민을 비롯한 전국 군사공항 주변 국민들의 간절한 탄식이 저에게는 메아리쳐 들립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겐 들리지 않나 봅니다. 느끼지 않나 봅니다. 보이지 않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처럼 안보를 판 이명박 정부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는 것이 롯데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초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대한민국입니다.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언한 중에 “우리 대사관에 국정원과 무관이 나가 있는데 정보기관에서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신분으로 나가 있지요, 그분들이?

○국무총리 한승수 무슨 신분으로 나가 있나요?

○안규백 의원 어떤 신분으로 나가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중국에 나가 있는 신분……

○안규백 의원 아니, 외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무관과 국정원들이 말입니다. 이건 외교적 마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국방무관들은 무관의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 국정원과 지금 정보기관에서 나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뭘니까, 외교관 신분으로 이분들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여권을 갖게 되면, 정부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 외교관 여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김동성 의원이 국정원에서 나가서 뭐하고 있냐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총리께서 그걸 바로잡아 줘야지. 우리 외교관에, 대사관에 국정원에서 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지난달 31일 사실상 제2롯데월드 허가를 결정하는 일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롯데월드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롯데 세상이 된 듯 합니다.

총리, 전광판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다산 선생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다산 선생을 저도 존경을 하고 목민심서를 즐겨 읽습니다 마는, 그리고 다산 선생 언급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롯데월드 관계는 제가 협의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안규백 의원 총리, 항공운항학회 용역 중간보고서 결론 중 9번 문항이 최종 보고서에서 통째로 누락·삭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어……

○안규백 의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에서 10번 문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좌우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착오로 빠졌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 각종 논란 속에 물경 14년을 끌어온 중차대한 나랏일을 진행하면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기에 너무도 황당합니다.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안보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발견을 하고 굉장히 과실에 대해서 질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실 있었던 데 대해서는.

○안규백 의원 오늘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와류·난류 시뮬레이션도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 이것은 완벽한 사기 보고서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오늘 문화방송에 나왔던 실험 관계는 용역진에서 가장 악조건이었던 풍속 15%에서도 안전하다면 굳이 다른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총리실로서는 일부에서 초속 5m 실험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료를 모두 밝히는 것

이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풍속 5m 실험까지 보완 요청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외국에서 다른 용역에서 갖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도 400m 기준으로 초속 15%를 한번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300m 고도 기준 풍속 15%, 10%, 5% 각각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허위 보고이고 허위 조사가 아닙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했던 실험은요, 3차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여러 가지 고도와 풍속 상황을 해서 하는 것이 프로그램 특성상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용역 담당 기술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만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물의 위치라든가 건물 주변 상황 등이 동일하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한 번의 실험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달 25일 행정조정실무회의에서 단기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십시오.

민간 전문가 이강운 씨에 대해서 총리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강운 씨는 대통령 전용기, 즉 공군 1호기를 위관급 장교 때 1년밖에 몰지 않았습니다.

총리, 1년 경력의 소유자를 7년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했던 민간 전문가로 총리실에서 탈바꿈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그것은 저도 보고받기는 6년 동안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코……

○안규백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이 1년뿐이 몰지 않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공군 2호기·3호기를 몰았습니다, 총리실에서요. 그리고 미국

에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근무한 사람을 마치 민간 전문가인 양 7년 근무한 것처럼 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허위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국방부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아마 의견을……

○안규백 의원 국방부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이것은 총리 산하에서 한 일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은 국방부에서 판단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고 2호기·3호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모시는 비행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그러면 모든 공군 조종기 비행사들을 불러다가 전문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1호기라고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공군 1호기를 7년간 조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나 이제……

○안규백 의원 자, 봅시다. 불리한 문항은 께맞추고 시뮬레이션은 조작하고 전문가 프로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제2롯데월드를 세 가지 종합세트 조작을 한 것입니다.

총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전점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의향 없습니까? 모든 것이 조작이고 모든 것이 가짜고 모든 것이 허위인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비행기 안전 운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이나 총리나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상황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아까 어느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것은 이미 있는 자료를 체크하는 것이지 새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 국방위에서 요구할 때 말입니다. 3~6개월 외국 전문기관에 맡겨서 외주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0일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인데 이렇게 10일 동안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왜 맡겼겠습니까? 국방위에서는 의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국방위에서 물론 의뢰해 가

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자료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압니다.

○**안규백 의원** 좋습니다. 총리, 다시 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께서 오전에 동편 활주로 3도 각도를 보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 해서 다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도를 틀면 1500m뿐이 이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안전거리 이격장치를 확보하려면 1850m, 7도를 틀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국방부와 총리만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국방부하고 총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안규백 의원** 총리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행전문가라고 그러면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는 비행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안규백 의원** 지금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행정조정협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총리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 국가안보상 손실이 있어도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 건설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허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뭐라고? 다시…… 죄송합니다.

○**안규백 의원** 이 시간 빼 주세요.

국가안보상 손실이 있어도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 건설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국가안보상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그거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 왜 그러면, 국가안보상 손실이 없으면 14년 동안 일관되게 제2롯데월드를 반대해 왔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몇 도 조정만 하면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왜 추진을 못 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그간에……

○**안규백 의원** 총리,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2007년도에 행정조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 어떤 상황이 얼마나 바뀌어져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못지않게 총리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07년 7월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있던 이후에 지난 12월, 지난 정부 말의 12월, 비행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롯데 측도 활주로 방향 변경을 비롯해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시설 장비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군도……

○**안규백 의원** 총리, 그 말씀을, 아주 제가 할 말씀을 다 해 주시는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아니, 제가 그것을, 그 허가성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이따 그 허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안규백 의원** 지난 광우병 파동에서 국민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확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1%라도 국민 안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알아 달라고 이렇게 촛불들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확인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롯데호텔 정면을 보니까 32층 건물이 확연히 반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555m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112층입니다. 3배 하고도 6층이 더 높습니다.

심적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

으로 공군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파일럿들은 저한테 심적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한 사고 확률이 1천조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뭐, 안규백 의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이 문제를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이 담보되고 확보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총리님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외교관으로서 모든 경험을 두루 갖추고 경륜이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어서 모른다…… 총리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과약을 해야 될 사항이, 또 이 이상 더 중요한 일이 현재, 국정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약을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이 07년보다는 다른 상황이 전개돼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이것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상존합니다. 위험이 엄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는 지난 14년간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서 안전과 안보 논리로 반대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광판을 보십시오.

과거 국방부 주장과 현재 국방부 주장이 180도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국방부는, “사고 잠재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고 양보할 수 없는 군의 최후의 양심”이라고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안규백 의원** 하지만 지금 국방부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사고 잠재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 없어야 될 건물에, 없어야 될 위치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사고 잠재 요인입니다. 이것은 제2롯데월드가 잠실에, 서울공항 앞에 제2의 청계산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83년 특전사 수송기, 53명이 청계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서울공항 앞에 그와 같은 높이의 청계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사고 한번 터져서 인명사고가 나야 군의 양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어느 지역에도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이든 평지이든 활주로나 주변의 민가이든 사고의 개연성은 있으나 국방부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는 법적, 작전적, 절차적 또 안전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와 또는 작전의 운용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규백 의원** 2007년까지 국방부는 제2롯데월드 건립은 고도 203m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롯데 측에서 비용 부담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반대할 당위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안규백 의원** 그러면 돈이면 나라 안보까지 다 팔아 치울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국방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언젠고,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방부나 공군은 작전 운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비행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그대로 갖고서 검토한 겁니다.

○**안규백 의원** 이러한 연유 때문에, 장관님 역대 선배들이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수 장관이나 여러 분들이 이 내용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바뀌어졌다고 이걸 찬성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 2007년까지 롯데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무조건 203m로 제한했던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는 비행 절차로서만 롯데 측이나 공군 측이 검토를 하였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전술 작전 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해서 허가 내주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허가하라고 밀어붙이니까, 롯데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국방부는 14년간 철통같이 지켜 온 논리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행 절차만 고려를 하다가 비행 절차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과 장비의 보장까지를 검토하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하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오신 겁니다.

○안규백 의원 이걸 재벌 특혜요, 정경유착의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자꾸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비행 안전 문제인 C-130 수송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중간보고서는 'C-130 수송기가 카테고리 D급으로 운영될 경우 서쪽 장주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드물지만 발생하면 동편 장주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거는 제가 이륙 시라기 보다는 착륙 시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그러니까 드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뭐가 드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사고, 그러한 비행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그럼 그런 비행기에 장애가 드물면 60년 동안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었는데 왜 군이 존재합니까, 드문 경우도 아닌데? 장관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드문 경우가 아닌데 68만 대군이 왜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

니다.

○안규백 의원 사고가 드물다고 했는데 그 드문 경우를……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니, 사고가 아니라……

○안규백 의원 항상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6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없는 군은 왜 존재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C-130 항공기에 그러한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장관님,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C-130 수송기가 롯데월드 몇 m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롯데월드와 이 3도를 활주로를 틀었을 때 현재 비행 절차대로 하면 약 1000피트 고도에서 동측으로 전환하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852m가 이격되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장관, 1852m는 안전 이격 거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전광판.

06년 항공안전본부에서 비행안전평가보고서를 보면 0.1노트, 185m입니다. C-130 수송기가 롯데와 가장 근접한 것은 185m입니다. 최소한 장애물 이격거리인 1852m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185m입니다. 1.5초 만에 시속 400km 130 수송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182m가 1.5초입니다.

이것은 순간보다 짧은 찰나적인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이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182m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182m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공군 교본에 나와 있고 공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장관이 그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이것 허가를 취소해야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182m에 관한 의미는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182m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C-130 수송기가 시속 400km로 갔을 때 0.1노트마일입니다. 이 거리가 185m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을 놔두고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장관이 모르고 결정했다면 이것 취소해야지요, 이제 아셨으면,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롯데로부터 1852m를 이격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안에는 성남기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다 만들기 위하여 3도가 전환되고 또 지상과 건물과 비행기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논리의 비약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는 저보다도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대화는 친구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악한 어떤 정권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반대자하고도 해야 됩니다.

닉슨은 전쟁 범죄자인 중국의 모택동과 대화를 해서 중국의 개방·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과 대화해서 소련을 동구라파의 민주화 기틀로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좁은 시야를 버리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죄악이 있어도 뉘우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안규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걱정하며

뒤순 감옥에서 순직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 발사로 7000만 겨레의 안전과 세계 평화가 또다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러가 이견을 표시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정을 보면 공화당의 레티넨 의원은 대북 제재 지속 법안을 내겠다고 하고,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초기에 북한의 이와 같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에 한국은 미국·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러시아와 이와 같은 발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제 발사가 났고, 비록 그것이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위성으로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안보리에서 어떤 형태로 제재 결의안이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자체 내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단독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우리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우선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위성으로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내의, 군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상황의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북한의 미사일 수출액이 매년 15억 불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부품의 북한 유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보셨는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충환 의원** 이와 같이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는 PSI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은데……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전달체계를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국가로서,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가입할 것을 결정했고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힘의 우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을 총리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또 차후의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가 ‘미·북 대화가 6자회담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고, 또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인 균형의 힘(power of balance)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화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CIA 동아시아 전 지부장인 브라운 국장의 말도 ‘한국 측이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보셨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충환 의원**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나 남북 대화가 지연될 경우에 지금 미·북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6자회담 과정 중에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시설 문제를 불능화 시키고 또 철폐시키는 데 미·북이 회담하는 것이, 양자회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과거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단단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대북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뜻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핵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제어하는 데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통미봉남의 결과, 즉 한국과는,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로서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통남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쪽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하루속히 대화의 문을 열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즈워스의 보고나 또 미국 외교의 균형의 힘 방향이나 또 브라운 전 국장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사를 조기에 파견하는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관해서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또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환 의원** 2008년도 우리 GDP가 9287억

불로 되어 있고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 교역액이 8573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역의존도가 9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이고 또 700만 교민이 해외에 살고 있고 또 OECD 회원국이며 2010년 G20 의장국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충환 의원 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출신이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세계 정치,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고 또 대통령께서 다녀 오셨습시다마는 G20의 의장국가로서 특히 내년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이고 또 겹쳐서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는 OECD 각료이사회 의장을 한국이 또 맡을 계획도 있고 해서 국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그동안에 진 빛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데 정부 재정의 비율을 보면, 외교 예산이 OECD의 경우에 평균 1.3%인데 우리는 OECD 평균의 46%밖에 안 되는 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OECD 평균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외교의 필요성이나 역량 또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세계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예산상의 지원이 충분치 못했습시다마는 G20의 의장국이라든가 OECD의 의장국이 된다는가 또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평화와 질병의 퇴치, 빈곤의 퇴치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도덕적인 지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외교 분야에서의 예산을 좀더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김충환 의원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정쇄신이라는 거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충환 의원 그 당시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충환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외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총리, 또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보수 수준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보다는 훨씬 지금 나아 있기 때문에……

○김충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의 비중 이런 것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커지고 글로벌 코리아, 소위 성숙한 세계 국가가 되려고 할 때에 외교 지평을 더욱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한 수요도 전 세계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외교적인 활동은 확대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도 확대를 해야겠지만 예산도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많은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김충환 의원 새 정부에 들어 와서 통일부의 정원이 8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본부하고 정보분석국이 통합이 되면서 직원이 94명에서 40명으로 5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통일부의 정책 기능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말 현재의 어려운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부의 대북 정보분석 기능이라든가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지금 개성공단 직원이 억류된 지가 벌써 열흘

째 되어 가고 있는데 통일부로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장관으로서 관계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그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좀 더 한 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외교적인 노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중국 쪽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그것은 그 단계로, 외교 문제로 그것을 제기해서 해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의원** 새 정부 들어와서 탈북 동포들을 돕는 외교부의 노력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적극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탈북 동포들이 북송되는 일은 없도록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동성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짧게 얘기 하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리고 지금 동남아 내지는 관계국들에서 통역인원, 조사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작년 말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적체 현상이 없이 신속하게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난번에 예멘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7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5만 7000명씩 해외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활동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여행 유의지역, 자제지역, 제한지역, 금지지역을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러한 제한지역에 가는 것을 여행자들에게 좀 분명히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여행자에게 고지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을 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행사, 관광업체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전이라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여행사한테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이것이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썬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상황, 또 한미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용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간에 의견 교환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들은 좀 늦추어서 미국을 보고 하자 이런 입장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FTA는 한미 양국 공히 이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지금까지 상대 국가하고의 의사일정을 맞춰서 기준을 한 예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자의적인, 독자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자기 국익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협상해서 처음에 한 것은 국회가 국회 일정에 따라서 가급적 조속히 기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정부는 지금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와 견주어 볼 때 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현재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70~75%를 해외무역에 의존하는, 소위 우리가 GDP의 75% 가까이 해외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가 현재 WTO DDA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신에 양자적인 협상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미 되었고 그다음에 EU하고도 곧 내달 안에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또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FTA의 허브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비록 WTO DDA 도하협상이 진전이 안 되더라도 우리로서는 한국을 자유무역지대의 허브로 만들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미국의 국무부장과 파트너이니까 미국 국무부장과 마찬가지로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국정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재로서는 진전 사항 없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원이 북한 측의 주장으로 일방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간, 9일째가 됐습니다마는 이 인원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위반이라고 보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인원의 조속한 조사 완료와 함께 신병 인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현재는 개성공단 안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견이 되지 않아서 확실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지금 개성공단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계속 지원하는 입장이지요, 앞으로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입장은 아직도……

○**김충환 의원** 그런데 만약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거나 또는 확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남북 간에 다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개성공단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북측 근로자 약 4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총액이 2009년 2월 말 현재 3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3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렇게 된다면 입주업체들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시기에 반도체·부품업체 등 중요 업체들이 핵심 생산라인을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언론에 오늘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저희들이 오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

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저도 물론 개성공단이 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이와 같이 위협을 받고 불안하다면 또 이와 같이 조업이 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장기간 휴업할 수 있는, 주요기업이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그것은 여러 가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험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사시에 기업의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아마도 훨씬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선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기업을 지키는 데 확실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통령께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북이 요구하는 6·15, 10·4 선언도 그 존중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환 의원** 말씀을 한번 다시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분명하게, 6·15와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합의를 우리 정부는 존중을 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환 의원** 4월 3일 대통령께서는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만약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은 아직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대화의 장에 들어오면 바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열 번 이상 더 하신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 방식으로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만 열어 놓을 것이라 아니라 가서 초청을 하는, 데리고 오는 이런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대화의 성숙을 위한 노력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계획을 잘 세워서 가지고 좀 여러 번 시도를 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다음에 적십자사나 민간단체 등의 활동은 지금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적십자 활동 자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활동했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또는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렇다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가능한 도구, 가능한 수단을 다 활용을 해야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워낙 경험이 있으시고 학문적으로 워낙 깊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잘 생각해서 가지고 대화의 문이, 우리가 열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한겨레고등학교의 증축 문제, 하나원에 대한 의료진 보강 문제 그리고 소요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겨레고등학교의 정원이 120명인데 237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리고 기숙사에 가 보니까 2명 들어갈 방에 4명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침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도 기숙사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2인 기숙사를 4인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유관단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나원에서 지금 20일에 1명씩 출산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의원** 그리고 1년에 1918명이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또 전부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중보건의 하나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 줄 수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가 소극적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한 이탈주민 중에 여성이 70%인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가입여성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20일에 1명씩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의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특히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탈북 동포들이 굉장히 치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워낙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충치가 생기면 한쪽만 치료를 해 준다, 양쪽 치료를 다 해야 되는데 이쪽은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하면 2억 9000만 원인데 매년 3000명씩 내려오는 동포들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 장관께서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이, 다른 문제도 조금 있지만 치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치아에 관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하여간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북 협력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신속하게, 확실하게 장관님이 잘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무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또는 힘의 우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미사일의, 국방에서 볼 때 북·남이 비교한다면 우리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사일 전력과 관련한 상대적 비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외의 어떤 비대칭전력들은 열세에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래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하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중·단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외교부장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MTCR의 가입국으로서 그러한 어떤 확산 방지 차원에서의 이런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고 또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은 미국이나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 미사일 문제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북한이 지난 1월 30일 NLL 관련 조항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꽃게잡이 철이고 연평도 내지는 서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은 두 번의 연평해전에서 그랬듯이 NLL을 우리 장병들의 피로써 지킨 선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MDL과 같이 명확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꽃게 성어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경과 또 우리 해군의 경계전력을 보다 더 증강 배치해서 어민들의 조업에 이상이 없도록 보장을 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적도 발하지 못하도록 사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충환 의원 제2롯데 112층 550m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군사시설의 안전 문제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난기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난기류에 관하여는 저도 용역보고서를 읽고 파악한 사항인데 최초에 풍속이 15%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아까 총리님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그것으로 10%나 5%를 유추하여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총리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지적 때문에 5%를 더 추가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국민은 우리 국방장관을 바라보고 국가의 안보를 믿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어떤 태도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지장이 없는 이러한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한국의 휴대폰과 전자제품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G20 의장국이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난 3월 46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어제 주가는 KOSPI가 1312까지 올라갔고 또 환율도 1306원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세계적 경제 위기를 넘고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외교·안보·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 의원(275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립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동성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장제원	장병헌	장현희	장혜숙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정병국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진수희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최구식	최규성	최규희	최문순
남경필	노영민	류근찬	문국현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욱철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친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은수	홍장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박종근	박종희	박주선	박준선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개의 시 재석 의원(138인)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상희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김성곤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김영우	김옥이	김우남	김유정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김태환	나성린	남경필	류근찬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문국현	문희상	박대해	박민식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선영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박종희	배영식	백성운	변웅전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서갑원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심대평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유철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유일호	유재중	윤석용	윤영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계진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상민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윤석	이은재	이정선	이종구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태희	이준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장윤석	전현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진석	정하균	정해결	조순형
조영택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태열
홍장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60인)

강명순	강성천	고홍길	권경석
김무성	김선동	김성태	김성희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재윤	김정권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김희철	나성린
문국현	박보환	박은수	박지원
배영식	서병수	서종표	송광호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윤석용
이경재	이두아	이범래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희	이주영	이진복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두성	전혜숙
정장선	정해결	조원진	조전혁
주광덕	최병국	최연희	홍일표

○산회 시 재석 의원(48인)

강길부	강명순	구상찬	권선택
김기현	김낙성	김노식	김부겸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충조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노영민
박보환	박지원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안규백	안효대	양승조
유일호	유정현	이계진	이낙연
이범래	이상민	이용희	이윤성
임동규	장윤석	정진섭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허천	황영철

○출장 의원(4인)

김효석	박영아	이재선	진영
-----	-----	-----	----

○청가 의원(6인)

김성순	노철래	이용삼	전여욱
정세균	홍희덕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안병욱
사무차장	임인규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방부장관	이상희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보고사항】

○의안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이화수·이춘식·정해결·강성천·노철래·김우남·정진섭·정갑윤·박민식·이계진·박준선·신상진·송훈석·조원진 의원 발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강성천·이화수·김재윤·정진섭·김성태·조원진·정미경·현기환·김소남·임두성·신상진·이정선·권선택·김부겸·안효대·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정하균·김성순·진성호·박은수·원희목·이화수·김성조·노철래·문국현·이종혁·김세연·황우여·이주영·김정권·유성엽·이병석·김선동·권영진·김우남·김영우·이계진·임영호 의원 발의)

**4월 7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이인기·최인기·임두성 강석호·김종률·김영진·김성수·손범규·이명수·김태원·유성엽·이진삼·김성조·권경석·조원진·김효재·김소남·정갑윤·황영철·안효대·신상진·박준선·허천·양승조·권영진·이해봉 의원 발의)

재일교포 복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심대평·김태원·임영호·이진삼·김창수·권선택·박선영·류근찬·송민순·

이상민·이해봉·유승민 의원 발의)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권선택·김창수·심대평·이상민·류근찬·임영호·박선영·이진삼·이재선·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10건 2009. 4. 6 정부 제출)

이상 10건 4월 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나성린·배은희·유정현·신지호·이두아·이은재·이한성·유일호·황영철·김효재·조진혁·조진래·안효대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9. 4. 6 허천·신상진·이인기·황우여·정희수·김태원·안상수·김성태·현기환·장광근 의원 발의)

4월 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의안 철회

민간조사사업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09. 3. 30 이한성·배영식·김성조·고승덕·신상진·김성수·허천·정희수·이종구·

강성천·허범도·안홍준 의원 발의)

4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기업도시 추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9. 4. 6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